

연구총서 03-06

#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

이 헌 경

통 일 연 구 원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

—◆—  
목 차

I. 서 론 ..... 5

II. 국제안보환경과 미국의 안보정책 ..... 7

    1. 테러와 비대칭위협에 직면한 국제안보환경 — 7

    2. 신국제안보환경하 미국의 안보정책 — 18

III.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 34

    1.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 34

    2. 신속배치전력 강화 — 42

    3. 선제공격 — 48

    4. 우주공간의 무기화 — 52

    5.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 55

IV. 주요 국가 및 지역의 대미 협력과 견제 ..... 61

    1. 중국 — 61

    2. 러시아 — 65

    3. 유럽 — 70

    4. 중동 — 76

    5. 북한 — 79

V. 결 론 ..... 85

참고문헌 ..... 93

## I. 서 론

테러사건직전 조성된 안보환경은 주적의 개념 대신 주도 국가 또는 상대 국가에 대한 대응이란 형태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테러대참사를 겪은 이후 테러조직이 주요 주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들은 테러위협과 비대칭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에서 부시 행정부는 신보수주의와 공화당의 전통이념인 미국적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테러위협과 비대칭위협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신보수주의는 힘을 통해 안정을 그리고 미국적 국제주의는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두가 힘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부시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적과 동지를 분명히 구별해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면 협상을 하되 불응하면 응징을 가하는 공격과 나쁜 신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과 함께 부시 행정부는 민주세계를 위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리고 법의 원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국가들을 후원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이상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돕고자 하며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돕지 않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힘과 권위를 세계무대에 과시하고, 위기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동맹국을 도우며 그들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형성하려 한다.

이러한 현실주의 노선과 부시 행정부는 21세기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적 틀 속에 안보전략의 핵심은 첫째, 안보정책의 전략 중심 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둘째,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력투사(戰力投

## 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

射) 능력을 강화하며, 셋째, 전력의 기동성을 높이는 신속배치전력을 강화하려 한다. 그리고 넷째,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을 추진하며, 다섯째, 선제공격을 추진하면서 상대로부터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맞서고자 한다. 여섯째, 우주공간의 무기화 구상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등을 통해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고자 한다.

또한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은 반테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9·11 테러사건이후 미국은 테러행위의 근본적 박멸을 위해 테러조직과 그 배후, 연계 또는 지원세력을 제거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특히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이 테러조직이나 테러지원국가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대테러전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 대해 많은 나라들은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으로 여기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 구상과 함께 대테러전 확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이끌어나기려 하는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본 연구는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국제안보환경과 미국의 안보정책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테러와 비대칭위협에 직면한 국제안보환경과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에서 미국의 안보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신속배치전력 강화, 선제공격안, 우주공간의 무기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등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 대해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제Ⅳ장은 미국의 안보전략에 대한 중국, 러시아, 유럽국가, 중동국가, 북한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의 견제 동태를 구분해 살펴볼 것이다.

## II. 국제안보환경과 미국의 안보정책

### 1. 테러와 비대칭위협에 직면한 국제안보환경

현재의 전략적 환경은 냉전시대와 다르다. 적과 동지의 구분이 명백했던 냉전기와 달리 세계는 더욱 위험스럽고 불안정하며 예측불허한 상태에 있다. 미·소가 동·서 양 진영을 나누어 통제력을 유지했던 시기와 달리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어떤 특정한 국가가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안보환경은 어느 일국의 주도적 일방적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정보통신과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나 이를 토대로 형성된 첨단군사무기체제와 다양한 형태의 무기개발은 새로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시장의 세계화 물결 속에 개방과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나 개방사회화로 세계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9·11 테러사건이후 국제안보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하자 국가들은 테러 위협을 극복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테러의 대상에 예외가 없어졌으며, 테러에 직면한 전 지구적 위협에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테러의 수단, 방법 등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테러가 감행되고 있다. 이제 테러는 위협과 공포의 수단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류적, 비도덕적, 무차별성과 함께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위협대상에 있어 예외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테러소멸 없이 개인, 사회, 국가, 지역, 세계의 안전이 보장되기 어렵게 되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테러위협과 비대칭 위협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의 안보관은 대테러 박멸에 상당한 비중을 두게 되었다.

테러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들은 국제안보의 목표와 수단, 방

법 및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국가들은 군사 분야는 물론 비군사 분야에까지 안보의 영역을 넓히는 포괄적 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이제 국가들은 과거와 같은 대응방식으로 테러위협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과 대테러전이 '회색전쟁'(gray war), 즉 얼굴 없는 전쟁이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적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여러 형태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이다. 이 때 세계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세계는 마약, 무기, 지적소유권, 인신매매, 자금세탁 등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거래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화에 반하는 범죄조직들은 정보혁명과 정치경제적 밀접성, 지리적 거리의 단축화 등을 통해 불법거래를 일삼고 있다. 그런데도 각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컴퓨터 네트워크망, 기능주의적 협력, 국경을 초월한 기술·자본·노동력의 결합, 교통·통신의 다변화 등으로 핵·미사일 기술·장비 밀거래가 과거에 비해 쉽게 이루어지고 생화학무기 생산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테러위협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다.

첨단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을 토대로 한 사이버테러의 위협은 새로운 형태의 공포를 주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은 사이버테러를 통해 전력공급 중단, 주식시장 마비, 식수의 오염, 비행기 충돌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핵발전소나 군사시설은 안전장치가 강화되어 있어 단기간에 사이버테러를 일으킬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이버테러의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은 냉전시 미국과 소련의 역할에 의해 유지되었던 비확산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군사력

증강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초래되고 있고 그 결과 군사적 위협이 지역적으로 남아 있다.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판단상의 착오, 기계적 고장이나 인위적 실수, 우발사고 등으로 핵보유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와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테러에 방에 있어 각 국가가 예외가 될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전히 테러위협과 게릴라전에 직면해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의 강력한 파괴력에 직면해 있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이러한 위협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 역시 국가적 차원의 테러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는 비대칭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 위협은 개별적이거나 통합적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일 수 있다. 또한 비대칭적 접근방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이니셔티브, 행동자유 혹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 및 혼란과 같은 중요한 심리적 충격을 추구한다.<sup>1</sup> 그것은 혁신적이면서 비전통적인 전술 그리고 무기·기술 등을 사용하

---

1 Steven Metz, "Strategic Asymmetry,"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01). 보충적으로 비대칭 안보위협과 관련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크게 비대칭의 차원(dimension), 수준(level), 그리고 형태(form)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비대칭은 긍정적 비대칭과 부정적 비대칭으로 구분 한다. 긍정적 비대칭은 상대방에 대한 우위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상이함을 이용하는 것이다. 부정적 비대칭은 상대방의 우위를 의미하면서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상대방의 공격을 수반한다. 이러한 긍정적/부정적 비대칭은 단기적-장기적(short/long term)일 수 있으며, 위협이 크거나 작을(high/low risk) 수도 있다. 이수형, "21세기 국제분쟁의 변화경향에 관한 이론적 분석: 제4세대전쟁, 네트워크, 비대칭위협을 중심으로"

며, 군사작전의 스펙트럼에 놓여 있는 전략·작전·전술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sup>2</sup> 그리고 상대방이 전혀 예측하지 않는 전략 전술을 감행한다. 상대방의 취약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대의 힘을 우회하거나 약화시키는 것도 주요 전략 전술이다. 테러리즘이 비대칭적 위협과 비대칭적 접근을 통해 감행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며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더욱 고조시킨다.

군사적 초강대국 미국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예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번영과 세계화를 지향하는 세계무역센터와 최강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국방부 등이 알 카에다 조직의 자살테러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sup>3</sup> 테러의 목적은 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알 카에다의 급진사상을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각시키면서 세계를 다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sup>4</sup>

---

로” 『21세기의 신 국제질서와 신 안보개념』 (21세기 정치학회 2002 추계학술회의, 2002.9.6),” pp. 58~59.

2 Joint Chiefs of Staff, *Joint Strategic Review*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1999).

3 미 본토가 외부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는 1812년 영국의 대위싱턴 공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에 속한 19명의 항공기 납치범에 의한 자살테러에 의해 숨진 사람만 78개국으로부터 3,000명 이상에 달한다. 전투기도 아닌 민항기를 이용한 자살테러공격에 의해서 그것도 오전 8시 46분부터 10시 26분 정확히 100분 동안에 이루어졌다. 남북전쟁이후 이렇게 많은 미국인 희생자를 하루도 아닌 100분 동안에 미국 내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은 분명 대사건이었으며 대재앙을 초래하였다. 희생자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 자살테러로 무고한 희생자 수를 극대화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이헌경,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30~31.

더군다나 미국은 미군과 대적할 수 없는 지역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나 사이버 전쟁을 개발해 비대칭 전쟁으로 맞서는 상황에도 직면해 있다. 여기서 ‘비대칭 전쟁’은 ‘제4세대 전쟁’(fourth generation warfare)<sup>5</sup>으로 일컬어진다. 근대국가의 전쟁은 정부, 군대, 국민이 힘과 수단을 통해 상대와 맞서 온 형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전쟁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 알면서 특정 전선에서 행해져 왔다. 또한 공격과 방어의 형태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4세대 전쟁에서는 국가가 더 이상 전쟁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민, 군대와 시민, 정규군과 비정규군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동시에 이념, 종교, 문화, 증오 등에 기반한 비국가, 초국가적 단위가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다.<sup>6</sup> 더군다나 9·11 테러사

4 President's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and the American People, September 20, 2001; Transcript: Bush Announces Start of a "War on Terror," *Washington File*, September 20, 2001.

5 3세대에 걸친 전쟁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은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에 입각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쟁은 점차적으로 비삼위일체가 될 것이며, 그러한 전쟁이 바로 제4세대 전쟁이 될 것이다. 그것은 상대방이 정정당당히 싸우기를 거부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갈등을 포함하므로 비대칭 전쟁이나 위협과 매우 흡사하다. William S. Lind et al, "The Changing Face of War: Into the Fourth Generation," *Marine Corps Gazette* (October 1989), pp. 22~26; Martin L. Van Creveld, Martin L. van Crevald, and Martin Van Creveld, *The Transformation of War* (Free Press, 1990); 이수형, "제4세대 전쟁의 등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비대칭 위협을 중심으로," 『9·11 테러 이후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제48차 학술회의 2001.11.22), p. 2 참조

6 이상현 "MD와 자살 테러: 비대칭 전쟁과 21세기 안보환경," 『정세와 정책』, 제63호 (2001), p. 7.

건이후 테러와 비대칭위협은 예측할 수 없는 대상, 장소,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테러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한 국가는 69개국에 이르며, 이들 중 20개국은 테러전쟁 지원을 위해 1만 6,000명의 병력을 보내었다.<sup>7</sup> 이와 함께 90개국의 수사당국이 2,400여 명이 넘는 테러혐의자를 체포하고 각종 테러정보를 미 중앙정보국(CIA) 및 연방수사국(FBI)와 교환하고 있다.<sup>8</sup> 의심할 여지없이 그 동안 국제사회는 정보력 강화, 공동대응, 국가간 정보제공과 교환 등 테러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태세를 유지하고자 한다. 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미국은 주요 동맹국·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의혹이 가는 테러조직들에 대해 비군사적 제재와 봉쇄, 외교적·경제적 제재에 나서고 있으며 테러행위가 확인될 경우 응징 차원에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이나 군사작전 수행에 나서려 한다.

하지만 대테러전 확대와 관련 국가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되어진다.<sup>9</sup> 첫째, 테러리즘 그 자체가 정치폭력임에 분명하나 일부 국가, 특히 제3세계 급진 국가의 경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둘째, 일부 국가의 경우, 상대 국가를 약화시키기 위해, 대체 수단으로서 테러리즘이라는 저강도 수준의 폭력을 통해 대리전(proxy war)을 수행하고자 한다. 셋째, 역테러 또는 보복테러를 우려해 대테러에 나서지 않으려 한다. 때문에 테러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끈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 외 국가적

7 『조선일보』, 2002.9.9.

8 『조선일보』, 2002.9.9.

9 이현경,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p. 54.

차원에서 테러를 겪지 않았던 국가들의 경우, 대테러에 소극적인 태세를 보여 국제협력을 이끄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지역강국과 많은 국가들은 미국이 테러리즘과 비대칭위협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끄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정책을 무시하고 국익에 우선한 일방주의 노선을 지향하자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반발해 왔다. 새 국제주의는 국익에 기초한 연대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국제주의를 무시해 왔다. 예를 들어, 미사일방어망 구축, 지구온난화에 대한 교토 의정서 거부, 생물무기를 금지한 1972년의 초안에 힘을 실어주는 의정서 초안 거부, 국제형사재판소 불참 등의 행동을 미국이 보인 것이다. 심지어 미국이 무시한 국제조약만 10개에 달한다. 이에 미국의 동맹국 및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해 왔다.

테러전 확대의 일환에서 추진된 미국의 대이라크전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이 이라크전을 극구 반대하였으며, 독일,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 등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반대의 대열에 가담하였다. 이렇게 미국의 주요 유럽동맹국들조차 미국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지만, 부시 행정부는 동맹국보다 자위권 우선 정책을 내세워 이라크전을 감행하였다. 즉, 국제사회의 반대와 일방주의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라크전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 중에도, 그 후에도 이라크 내에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미국이 내세웠던 전쟁의 명분이 약해 진 것이다.

대이라크전은 악의 정권 교체란 명분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면 이라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재자들이 제거되면 아랍세계가 새롭게 탄생한다는 제국주의를 옹호한 지식인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착오였다. 제2차 대전이후 독일이 미국에 순응한 것과는 달리 이라크는 미국에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미군보다 전후 미군의 사망이 더 많고 대미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잘 예증한다.

보충적으로 이라크전은 석유사업이권과 연관이 있었다. 미국은 이라크전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원활한 석유통로를 마련하려 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이라크에 진출하지 못한 미 기업들의 석유사업까지 포함된 것이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이라크전을 반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이라크에서 누렸던 석유사업 이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이탈리아 등과 함께 이라크전에 나섰다. 그 결과 미국편과 그 반대편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면서 유럽을 분열시켰다. 특히 미국은 독일이 미국의 반대 편에 섰던 사실에 놀라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독일 패전이후 미국은 서독의 재건에 앞장섰고, 독일통일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독일이 등을 돌린 데 대해 미국은 상당한 실망과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라크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이 일방주의를 강행하자 많은 국가들이 반발해 왔다. 이들 국가에는 프랑스, 독일 등 미국의 유럽동맹국들과 함께 중국, 러시아 등 세계의 군사강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의 지역적 개입을 견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분쟁과

국제사회의 위협을 미국의 주도가 아닌 다자 개입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국제분쟁 역시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엔의 역할과 국제법에 기초한 다극화되고 민주적인 세계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유럽은 여전히 다자주의, 국제문제에 있어 국가간 상의, 과정 등을 선호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감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중동의 경우는 특히 심하다. 중동내 미 우방국들은 미국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지역에서의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요컨대, 세계는 초강대국의 위치에서 대테러전과 비대칭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미국식 국제질서에 대해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체제에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것을 우려해 왔다. 냉전이후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 WTO)는 그 효력을 잃어 버렸으며, 구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뒤 NATO에 맞서는 현실적인 적이 대두되지 않고 있다. 과거 미국과 적국이었던 나라들조차 이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가운데 어느 나라도 서유럽을 공격할 능력도 그럴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미국은 NATO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 주 동인은 유럽에서 영

---

10 Kenneth B. Moss, "Reasserting American Exceptionalism - Confronting the Worl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Bush Administration," in Feidrich-Ebert-Stiftung, ed., *Internationale Politik und Gesellschaft* (Bonn: Verlag J.H.W. Dietz Nachfolger GmbH, 2003), p. 141.

향력을 강화하고, 동맹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코소보, 유고 등 유럽내 분쟁지역에 대한 미군 파병을 가급적 자제하고자 하였으며, 대신 그 부담을 EU 측이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화하였다. 그것은 EU가 독자적인 평화유지군을 창설하고 이를 통해 유럽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 평화유지군이 NATO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단서로 달았다. 즉, 미국이 주축이 된 NATO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신국제안보환경하에 미국은 NATO에 새로운 역할을 맡기고자 한다. NATO는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유럽과 북미에서 동맹국의 한 회원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워싱턴 조약」(Washington Treaty)의 5조<sup>11</sup>를 통해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전 NATO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NATO의 역할에 불만을 보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NATO가 참전결정을 신속히 내려주기를 기대했었지만, 역외 파병문제를 두고 NATO 회원국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대부분의 NATO 회원국이 군대를 보냈지만 이는 NATO의 공식적인 군사행동이 아니었다. 이러한 NATO의 행동을 미국은 내내 못마땅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은 NATO가 역외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신속한 대테러 공격이 가능한 동맹으로 변신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를 추진해 왔다.

동시에 미국은 NATO의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루마니아, 불가

11 조약 5조는 1949년 NATO 설립 때 제정되었으나 그 동안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 미국은 NATO가 5조를 9·11 테러사건에 적용해 주기를 희망했으며 NATO는 2001년 9월 12일 이를 적용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7개국의 회원가입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NATO의 과거 주적이었던 소련의 위성국들을 향한 NATO의 역사적 동진과 확대가 마무리된 것이다. 냉전종식과 WTO 해체로 인해 NATO와 러시아 중간 힘의 공백지대에 놓인 동유럽 국가들은 NATO 가입을 통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안보의식은 결국 미국의 NATO 동방확대를 이끌었다. 그 결과 유럽대륙에서 냉전의 흔적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유럽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지역과는 달리 동북아 지역의 국제안보환경은 여전히 냉전의 구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동북아 지역은 어느 일국이 정치군사적 사안에 대해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미·일·중·러 모두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군사적 양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체제, 이념, 문화가 다르고 국가이익과 전략적 목표가 상충되는 점도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다.

이러한 안보환경 하에 미·중·러의 삼각관계는 서로를 견제·협력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21세기 군사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정치·군사·경제 협력체제를 통해 유럽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유지하려 하며 이러한 협력의 확대를 통해 러시아가 중국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의 전략적 입지가 압박을 받는 상황을 인식, 주변 CIS 제국과의 안보분야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열강들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모색을 통해 미국의 신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관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만큼 관계가 진전되었다. 양국은 최근의 국제질서가 미국과 NATO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국제정치무대에서 미국의 패권과 독주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응, 양국은 ‘평화공존 5원칙’ - 상호존중, 주권과 영토보호,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 을 비롯 북경과 모스크바와의 hot-line을 가설하는 협정에 서명하는 등 양국간 무력충돌을 피하면서 서구로부터의 압력에 대해 공동의 대응 자세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 그 내용 가운데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려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를 통해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 요컨대,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에 공동의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반미 연합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이다.

## 2. 신국제안보환경 하 미국의 안보정책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대칭적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sup>12</sup> 군

---

12 군사적으로 미국은 최강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능력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우량의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병사 개개인에서부터 부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전, 베트남전, 냉전 당시보다 훨씬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어떤 지역 분쟁도 과단성 있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William Perry and John M. Shalikashvili, "The US Military: Still the Best by Far" *Washington Post*, August 10, 2000 참조. 미국의 군사력은 다른 기준에서도 측정된다. 미국의 군사예산은 그 다음 9개국 전체 예산을 그리고 국방

사분야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을 통해 그 어느 국도 넘  
보지 못할 군사력을 보유하고자 한다. 더구나 미국은 C3(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 IRS(intelligence, reconnaissance, surveillance) 능력<sup>13</sup>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보, 금융, 생산, 지식 등 네 개의 힘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문화, 정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우위를 보이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힘과 권위, 군사력과 경제력, 정보력 등  
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정보수집·처리능력, 통신·제공권 장악, 장거리 무기  
및 유도장치 능력 등 군사 분야 전반에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와 같이 미국은 전방위적 군사적 위세를 세계에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즉 미국의 패권에 기반한 국제적 안정과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현실  
주의 외교’, ‘힘을 통한 평화’, ‘우방의 신뢰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적 국제  
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 노선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는 대화  
를 통한 평화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에 반대적인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하면  
서 세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적 국제주의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국제기구 또는 레짐을 강  
조하는 다원주의적 입장, 현실주의의 양자 동맹을 강조하는 양자주의적 입

---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그 다음 6개국의 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렇다고  
미국이 국방예산을 GDP에서 많이 할당한 것은 아니다. 일상적으로 미국은  
GDP의 3.5% 정도를 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세계  
초군사강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그 자체만으로 미국의 국력이 나타난다.

13 미국은 첩보위성을 주축으로 한 영상정보 능력과 전자통신 첩보망을 기초로  
한 암호정보 등 기술정보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장과 달리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 이는 강력한 군사력과 도덕적 명료함에 기반한 레이건의 정책을 역사적 준거로 하고 있으며, 힘과 군사력을 토대로 확고한 안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평화도 오직 힘에 기반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힘이 곧 정의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보수주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sup>14</sup> 첫째, 미국이 민주적 우방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미국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적대적인 정권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원칙에 우호적인 국제질서 유지·확장과 안보, 번영을 위해 미국이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넷째, 이러한 목표를 위해 군사력 사용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보다 더욱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제일주의와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도덕적 상에 세계를 꿰맞추면서, 미국의 이익이 세계의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논리와 함께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이상이나 주의는 궁극적으로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이끌고 있다. 일방주의는 미국에 유리한 국제질서를 형성하면서 세계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방주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국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sup>15</sup>

14 [www.newamericancentury.org/statementofprinciples.htm](http://www.newamericancentury.org/statementofprinciples.htm);  
“Neo-Conservatism,” [home.earthlink.net/~platter/neo-conservatism/](http://home.earthlink.net/~platter/neo-conservatism/) 참조.

15 김종완, 「냉전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일방주의와 다지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2003-9 (경기: 세종연구소, 2003), p. 11.

이러한 목표를 위해 미국은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 한다. 이는 결국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따른 국제질서를 이끌고 가려는 것이며, 심지어 목표달성을 위해선 군사력 사용까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방주의에 대해 많은 국가들,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일방주의는 국가간의 외교적 협력과 다자주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다자주의를 통해 구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고 안정된 유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은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그 이전까지 유지해 온 다자주의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미국과 유럽의 외교안보의 기틀인 다자주의를 미국이 깨뜨리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미국의 이상이나 주의를 모두 일극 지배구조와 일극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나 국가군이 지역적 패권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며,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할 만한 위치에 서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 강력한 군사력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 국익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자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할 국가나 연합세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세계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며, 경찰국가로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세력에 대해 응징하면서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려 한다.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초강대국으로서의 힘과 권위를 세계무대에 과시하고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

동시에 미국은 위기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동맹국을 도우며 그들과

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형성하려 한다. 아울러 민주세계를 위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리고 법의 원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국가들을 후원하고자 한다.<sup>16</sup> 이를 위해 안보능력과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고, 전 세계가 민주주의 체제 및 시장경제를 지향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적 가치를 일방적 이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유와 개방이 보장된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이상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 이상과 함께 미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테러조직과 전체주의적 지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키고, 둘째, 강대국간 우호관계 수립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며, 셋째, 전 세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건설을 지원해 평화를 확대하는 것이다.<sup>17</sup> 이러한 정책의 틀 속에 미국은 국제 테러리즘의 척결과 미국 및 우방에 대한 공격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동맹 강화에 나서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적성국의 위협을 예방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 유지 및 이를 위한 국가안보기구의 개혁 등의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sup>18</sup>

한편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이상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도움 것이며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돕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이

16 Colin L. Powell, Secretary of State Nominee, Confirmation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enate, January 17, 2001.

17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New Strategic Framework." Remarks by the President at 2002 Graduation Exercise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West Point, New York, June 1, 2002 (hereafter cited as Bush's Speech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t West Point).

18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17, 2002.

고 있다. 그것은 반테러에 적극 협조하면 동지요 그렇지 않으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구분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격과 나쁜 신조에 대해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할<sup>19</sup>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테러근절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테러범들을 지지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sup>20</sup> 한마디로 평화의 길과 테러의 길 중 양자택일하라는 것이다.

초대형 테러를 겪은 이후부터 미국은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한 세계전략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비확산을 추진하고자 하며 범세계적 차원의 국제협력과 함께 테러위협과 비대칭 위협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는 곧 예방 위주의 사전적 대테러리즘으로부터 대응적 테러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테러대응에 있어 그 대상은 세계에 널리 있는 테러조직들이며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테러지원국가들이<sup>21</sup> 포함된다.

미국은 테러지원국가이자 무법체제들이 평화에 대한 위협, 광적인 야망, 잠재적 파괴력, 국민탄압을 일삼는 체제이며, 바로 악의 축의 국가들이

19 President George W. Bush's Inaugural Address, January 20, 2001.

20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and the American People, September 20, 2002.

21 미국은 이란, 이라크, 북한, 쿠바, 수단, 시리아, 리비아 등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명해 놓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란은 레비논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에 무기화 훈련인력·자금을 지원해 왔다; 이라크는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집단들을 지원해 왔다; 수단은 반미 테러를 위해 화학무기를 생산했다; 시리아는 팔레스타인 세력 테러리스트들에게 재정 지원을 했다; 쿠바는 테러리스트들에게 훈련장소를 제공하였다; 북한은 KAL 88기를 공중폭파하였다. 특히 미국은 이란이 테러행위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보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을 악의 축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며<sup>22</sup>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 미국과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핵, 생화학무기를 추구·보유하고 있는 무법정권으로부터<sup>23</sup> 비롯된다고 본다. 더군다나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악의 정권들이 테러나 대량살상에 나서고 심지어 테러리스트들에 이들 무기를 밀매할 수 있어, 테러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과 전술로 강력히 맞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초기 미국은 「선택적 개입주의」(selective engagement)를 군사외교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국제적 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소말리아와 코소보 등 전 세계의 국지적 분쟁에 분별없이 개입한 결과 미군의 손실과 미국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한다. 이를 근거로 부시 행정부는 「선택적 개입주의」 전략을 지향하였다. 그것은 클린턴식의 일방적 개입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미국이 911과 같은 긴급소방대의 역할이나 지구촌 경찰국가 역할을 자처하면서 다른 국가의 문제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으며, 국익 차원에서 확실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즉, 미 국익에 기초한 국제주의였다. 이러한 노선에 따라 미국은 전략적 국가이익이 확실할 때 군사력을 사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테러대참사이후 미국은 「포괄적 개입주의」(comprehensive engagement)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주의를 토대로 미국은 군사적 주도권을 잡으려 하며, 테러 및 비대칭위협과 관련된 국제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

22 "President Outlines War Effort,"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George C. Marshall ROTC Award Seminar on National Security, April 17, 2002.

23 President Bush'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8, 2003.

하려 한다. 이를 통해 9·11 테러사건이후 조성된 국제안보환경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려 한다.

테러대참사이후에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일환에서 러시아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유럽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유지하려 한다. 냉전시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봉쇄를 돕는 나라에 대해선 독재를 하든 강압정치를 하든 문제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손을 잡았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파시스트인 프랑코나 공산주의자인 모택동과도 미국은 소련타파를 위해 연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서로 협력하였다. 이러한 냉전식 논리를 이제 중국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한국-대만-인도로 이어지는 반달형 아시아 방위선에 러시아를 동참시켜 중국을 타원형으로 둘러싸는 ‘보름달형 방위선’을 구축하고자 한다.

동서 냉전시기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국은 전략적 무게 중심을 유럽대서양 쪽에 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더 역점을 두려 한다. 이미 미 국방부는 「Joint Vision 2020」를 통해 미국의 방위 전략의 중점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려 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는 2001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를 통해 재차 나타난다. 동 보고서는 아시아가 대규모 무력충돌 가능성이 큰 지역이 되고 있으며 벵골만에서 한반도의 동해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연안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지적하고 있다.

냉전종식으로 안보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유럽에 비해 아시아는 군사력 확대의 새로운 무대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는 실질적이며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무역

거래량은 거의 5천억 달러에 달하며, 1,500억 달러 이상이 이 지역 전역에 투자되고 있다. 세계 전체 무역량의 3분의 1이 이 지역의 주요 해상로를 이용하고 있고, 아라비아만 원유의 3분의 2가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군 인과 군속을 제외한 약 40만 명의 미국 시민이 아시아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듯 이제 아시아는 미국의 국익에 직결되는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어 왔다는 판단 하에 지금까지 유럽에 두었던 군사적 비중을 이 지역으로 돌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태평양 해역에 공격용 잠수함 증강 배치, 아시아지역 군사훈련 확대, 아시아 중점 전략 연구, 역내 미군주둔형태 변화를 위한 외교노력 강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를 미래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21세기에 반미적인 군사대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뒤흔들 수 있는 떠오르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더군다나 공산권에서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활력 있는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여기면서 '동등한 경쟁국'의 부상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군사비는 GDP 4~5%에 해당되지만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라 이것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사비가 증대되면 중국의 전반적 군사력이 증강<sup>24</sup>될 것이며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

24 중국의 국방예산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향후 9%대의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시 GDP는 엄청날 것이다. GDP의 증가는 국방예산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그럴 경우 10%는 상당액에 해당된다. GDP 증가를 근거로 계산할 때 중국의 GDP는 2050년 경 미국의 그것을 추월할 것이며, 2040년경에는

은 더욱 팽창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급속히 팽창하는 경제에 힘입어 머지않아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위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계를 늦출 경우, 중국이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처럼 아시아 전체를 위협하는 군사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을 잘못 평가한 영국의 실수를 기억하고 있으며, 이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 한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합병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더라도 중국지도자들이 군사력 증강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대중 견제와 함께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위협이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상존해 있다고 본다. 미국은 냉전종식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감소했다고 보지만 북한,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로 간주되는 국가들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새로운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상대를 공격할 경우 상대방의 전략은 계산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국은 러시아를 더 이상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위협은 오히려 불량국가로부터 오며, 이들의 공격이 우발적, 자살적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고자 한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및 대테러 국제공조를 이끌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그것과 비슷해 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구상과 함께 스위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20개국이 참가한 G8(서방 선진 7개국 +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및 대테러 국제공조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였다. 그 결의는 북한,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 우려국의 수출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실천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이 핵문제를 계속해서 악화시킬 시, 국제사회가 제재조치<sup>25</sup>를 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결의로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에서 세계문제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은 EU가 단일외교정책과 통일된 전략을 가지고 정치 통합체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전환한 구 사회주의국가들을 EU에 편입시키고자 하였으며, EU가 정치통합체로 나아가기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체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유럽국가들이 자국과 함께 세계안정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 일환에서 미국은 NATO 신속대응군이 활동 영역을 유럽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어디든 사태 발생 후 30일 안에 파

---

25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국제적 틀은 있으나 이러한 무기들의 수입·수송을 금지하는 국제법적 근거는 없다. 해적행위, 국기계양표시 거부, 무국적선, 노예무역, 무허가 방송 등을 행할 때, 유엔 해양법 110조는 공해상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행위와 관련, 니포와 같은 권한이 해양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선박을 니포할 수 있는 권리 여부는 그 선박과 관련된 사실 및 정보에 달려 있다. 또한 국제법상 선박이 무기나 마약밀수 등과 관련된 의심스런 행동을 보일 경우, 경찰이 승선·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박이 구두 경고를 무시할 경우, 경고 사격도 가능하다.

견대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NATO가 유럽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NATO가 유럽의 수호자에서 세계경찰로 탈바꿈해, 세계문제에 미국과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편 미국은 NATO 군사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NATO 회원국들에 군사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면서 NATO의 집단 합의식 군사작전을 반대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단독행동으로 돌아서게 하고자 한다.

9·11 테러사건이후 미국은 동맹보다 자위권<sup>26</sup>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테러로부터의 방어와 동맹국들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미국은 자위권을 택할 것이다.<sup>27</sup> 테러대참사를 겪은 미국으로선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체계가 깔려 있고, 그게 바로 미국이 신봉하는 가치”<sup>28</sup>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확실한 무력공격 징후가 없더라도 잠재적 공격이나 테러위협이 있을 경우,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며, 필요할 경우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독행동도 불사하려 한다.

반테러를 위해 미국은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반테러에 협력하는 국가나 단체를 도우려 한다. 이것은 미국의 변화된 정책이다. 이는 파키스탄과 인도를 대상으로 취한 미국의

26 이와 관련, 유엔은 테러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처하는 개별적·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보장해 왔다.

27 이러한 행동방침은 어떤 일이든 성공을 하면 국제동맹 구축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다.

28 George W. Bush's Remarks, Cited on Bob Woodward, "A Course of 'Confident Action,'" *Washington Post*, November 19, 2002.

행동으로부터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군에 대한 영공통과와 공군기지 개방 등 테러전쟁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테러관련 정보를 제공해 온 인도에 대해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파키스탄의 경우, 무사라프 대통령은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고, 핵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전을 통해 미국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효율적인 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동티모르사태이후 단절됐던 인도네시아와의 군사적 유대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 역시 효율적인 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더군다나 미국은 불량국가로 간주하는 북한, 이라크,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7개국 중 대테러전쟁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수단과 시리아에 감사의 뜻을 표명한 바 있고, 시리아의 유엔 이사국 비상임 이사회 가입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시리아의 안보리 가입을 반대했다. 그러나 대테러전에 임하고 있는 미국이 시리아의 협조를 얻기 위해 그들의 안보리 가입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라크전 이후 미 상원은 시리아가 테러범들을 은닉하고 이라크 점령 미군에 적대적인 세력들에게 통행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시리아 외교·경제·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대·반테러에 협조하면 동지요, 그렇지 않으면 적대적으로 대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테러박멸을 위해 미국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어떤 국가나 조직도 잠재적인 공격목표로 삼는다는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에 따라 「알카에다」(al Qaeda) 테러조직 박멸은 물론 이 조직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으

로 활동해 오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을 타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sup>29</sup> 이를 위해 미국은 초국경적 정보·감시 활동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며, 테러의 간접적 지원요소들, 마약밀매, 무기밀매, 군사기술 밀수출, 조직범죄, 돈 세탁 등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

나아가 미국은 자유를 수호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더러운 전쟁’(dirty-war)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sup>30</sup> 그것은 범죄자 암살자와 같은 킬러를 고용해 암살 고문에 나서는 등 더러운 수법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9·11 테러사건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더러운 전쟁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인의 사고는 급속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테러리즘을 예방·격퇴할 수 있다면 더러운 전쟁이라도 괜찮다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더러운 전쟁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들을 추적·격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피난처를 제공한 사람이나 조직들에 대해서도 처단을 내리려 한다. 그것은 테러그룹의 모체를 추적하고 단순히 테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를 격퇴시키기 위한 것이고 테러리스트들의 지도부를 색출하려는

29 미국은 이슬람 과격파 근본주의자들을 대테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결코 ‘서방 대 중동’ 또는 ‘기독교 대 이슬람’의 대결 구도를 원하지 않는다.

30 과거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와 중남미 지역에서는 정권적 차원에서 더러운 전쟁을 일삼았으며, 그 방법에 의해 좌익과 좌익정권을 소탕한 바 있다. 미국 역시 쿠바의 카스트로 및 칠레의 알렌테를 암살하려 하는 등 더러운 전쟁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더러운 전쟁방법에 비판이 일자 미 의회는 암살 및 더러운 전쟁 금지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더러운 전쟁 방법은 테러대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고려되지 않았다.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사전 예방책’(preventive measures)과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조치를 통해 테러리즘을 대비하고자 한다. 사전 예방책은 사전적 대테러리즘이다. 정보를 바탕으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단체들의 거점 또는 활동 근거지를 추적하여 사전에 조직과 조직원들을 제거·체포함으로써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반면 위기관리는 테러리즘이 발생한 이후 대응 처리하는 방식이다. 사전 예방책이 실패해 테러리즘이 발발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요컨대, 사전 예방책이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위기관리는 단기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테러분자에 의한 컴퓨터 기술 이용, 사이버 테러<sup>31</sup>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며 CBRN(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로 일컬어지고 있는 화학, 생물, 방사능, 핵물질을 이용한 이른바 슈퍼테러리즘(super terrorism)에 대응하고자 한다. 특히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테러리즘, 즉 ‘더러운 폭탄’(dirty bomb)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 ‘더러운 폭탄’은 핵폭탄은 아니지만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담아 사용하는 방사능 폭탄이다. 항공기를 이용해 원자력 발전소에 충돌시킬 경우, 방사능 폭탄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량 살상무기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러운 폭탄이 테러리즘에 사용될 때 사회전체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면서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

핵테러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의 핵문제 전문가들은 테러

---

31 보다 자세한 설명은 Lanrence K. Gershwin, "Cyber Threat Trends and US Network Security," Statement for the Record for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June 21, 2001; "The National Strategy to Security Cyberspace," February 2003.

리스트나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향해 핵테러를 감행할 경우, 당장의 실질적인 물질 피해는 뉴욕 세계무역센터의 파괴만큼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후속 피해와 후유증 및 파급 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sup>32</sup> 미국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돈만 주면 무엇이든 파는 북한의 핵물질 밀매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막고자 한다.

미국은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를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들에겐 그 책임을 지게 할 것<sup>33</sup>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테러국가나 조직들에게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는 국가나 조직에 대해선 철저히 봉쇄하거나 타격을 가하려 한다. 이는 미국 및 우방·동맹국의 안전을 테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자 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은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 보다 많은 달러를 얻기 위해서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미사일수출이 외화획득의 주 수단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에게 미사일수출 중단을 요청해 왔으며 이를 주시해 왔다. 이외 이란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와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기술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한 세계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은 다양한 방법과 전략 전술을 가지고 미사일위협에 대비하고자 한다.

32 *Defense News*, June 2, 2003.

33 Ron Fournier, "Bush Warns Iraq, N.Korea on Weapons," *AP*, November 27, 2001.

### III.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 1.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반확산의 새로운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과 함께 테러리즘과 비대칭 위협에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9·11 테러참사를 겪기 전까지 미국은 세계를 위협하는 미사일과 핵·생화학무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 및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전략을 추진해 왔다.<sup>34</sup> ‘비확산’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 정책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기술이전 통제와 경제·외교제재·교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확산’은 군사적 해결을 찾는 것이다. 그 정책은 상대국이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해 올 경우 군사적 대응을 조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대참사이후 미국은 테러박멸을 위해 반확산에 보다 비중을 두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미국은 핵무기 감축 및 비핵국가의 핵불용을 통해 핵위협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전략 핵탄두 감축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전략 핵무기 감축협정을 통해 전략 핵탄두를 향후 10년간 1,700~2,000기로 감축하고 연간 2회 이상 군축 이행 쌍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sup>35</sup> 핵무기 감축은 현재 미국 7,295기, 러시아 6,094기

---

34 George W. Bush,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cember 11, 2002; "Bush Administration Releases New WMD Strategic Plan," December 11, 2002; Remarks by President Bush on U.S. Will Meet WMD Threat with 'Confidence, Determination,' December 11, 2002.

의 핵탄두를 3분의 2선으로 대폭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핵탄두는 완전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폐기되고 일부는 저장된다. 핵탄두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 핵무기는 점차적으로 감축될 것이며, 이는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줄이면서 북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와 중국의 핵확산을 억제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게 한다. 동시에 핵무기 과다 보유로 인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마려는 그들의 안보가 위협에 처해 질 때 사전 공지에 의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외는 별도로 양국은 핵무기를 추가로 개발·실험·생산하는 주요 프로그램을 종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방어무기인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하였다. 이렇게 양국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새로운 21세기를 이끌어가려는 안보주역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갈등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들의 핵보유 의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핵개발에 나서 왔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탈냉전시기에도 핵보유국의 증가, 핵보유기술 확대, 핵탄원료 불법거래 등은 제3국의 핵개발과 돌발적인 핵전쟁을 사전에 통제할 수 없는 제3의 핵시대에 직면해 있다.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주요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국가들의 노력을 좌절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그들 외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브라질·남아공 등 16개국에 핵농축 및 재처리시설을 보유했거나 아니면 이미 핵보유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

35 "Joint Declaration on New U.S.-Russia Relationship," *Washington File*, May 24, 2002.

폭탄이 투하된 이후 어느 강대국도 비핵국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남북한·일본·스웨덴·대만 등의 나라들도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과학적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언제든지 작정만 하면 핵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가이자 악의 축의 국가로 간주하는 북한의 핵개발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가동이 제네바합의에 의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새로운 카드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는 「제네바합의」,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협정,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등 4개의 국제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은 8,000여 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북한의 핵개발 추진은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북한이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을 상대를 가리지 않고 외화획득을 위해 밀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93년이래 100여 개의 테러단체들이 550건 이상 핵밀매를 시도했다<sup>36</sup>는 2001년도 UN보고서는 테러리즘의 대형화를 이미 예고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밀매는 테러리즘의 대형화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중동 적성국가나 테러조직들에게 핵관련 기술 장비를 밀매하는 행동에 나설 때, 이를 자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테러지원행위로 간주, 본격적인 봉쇄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재처리 본격화, 핵실험, 핵물질 밀매 등을 금지선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중 핵물질 밀매에 대해서는 봉쇄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려 한다.<sup>37</sup>

36 [www.worldtribune.com/worldtribune/Archive-.../ss-terror-05-17.htm](http://www.worldtribune.com/worldtribune/Archive-.../ss-terror-05-17.htm)

37 핵물질의 비밀스러운 거래와 이동을 국가간 정보와 최신의 탐지 장비로 찾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플루토늄의 경우, 방사선을 거의

둘째, 미국은 생화학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한다. 탄저테러에 초강대국 미국조차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감안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은 대량살상과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 보유에 집착하고 있다. 만약 생화학기제가 미사일 발사수단을 가지고 있는 테러집단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테러리즘에 의한 대량살상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게 된다. 실제로 세계는 생화학 테러에 취약한 상태이며, 테러리스트들이 핵이나 생물학 혹은 화학무기로 테러행위를 수행할 시 수백만 명이 살해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탄도미사일 및 생화학기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핵미사일 비확산과 함께 생화학무기 비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의 전면적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생화학무기를 비롯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소수의 무법체제들에 보다 강도 높은 경계를 보이고 있다. 이들 체제는 생화학무기를 시험·병기화해 왔다. 미국은 테러공격의 또 다른 수단으로 생화학무

---

방출하지 않아 극도로 탐지하기 어려우며, 손가방으로 전달이 가능해 육상·공중 해상봉쇄를 취하더라도 그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육상봉쇄의 경우, 중국의 전폭적인 협력 없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수출을 원천 봉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780마일에 이르는 북·중 국경을 통한 밀반입을 감시하기 위해선 1만여 개의 감지기가 설치돼야 하며, 북한이 10분의 1 크기로 잘라 밀반출하는 경우엔 감지기 수를 3배로 늘려야 한다. 감지기 설치를 위해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해상봉쇄의 경우, 핵물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철저히 검색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나, 선박의 정선·승선·수색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플루토늄 선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공중봉쇄 경우, 정찰위성을 포함해 아무리 정교한 정보 탐지술을 가동한다 해도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작은 용기에 담아 비밀리에 운반할 시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기의 사용 가능성과 동 무기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셋째, 미국은 미사일 확산을 저지하고자 한다. 미사일 프로그램은 자국의 기술로 개발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다른 국가들의 직접 지원에 이루어진 것도 있다. 이렇게 각 국가에서 개발된 미사일은 정확도, 목표물 도달률, 신뢰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경우, 대포동 1호 위성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SLV)를 대륙간탄도탄으로 개조할 경우,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할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생화학 기체를 운반할 수 있는 소량의 유도탄 탄두(payload)를 운반할 수 있을 것이다.<sup>38</sup> 나아가 사정거리가 4,000~6,000km에 달하는 대포동 2호 미사일 개발이 완성되고 기술적 문제가 극복된다면, 생화학무기를 이들 미사일에 부착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 이란의 경우, 우주 발사용 장거리 로켓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방식을 수용해 수년 내 미국에 소형 핵탄두를 날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시험할 수 있다.

미국은 외국의 지원이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촉진시키며, 개발시간을 단축시키고 생산 지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란의 사하브(Shahab)-3, 파키스탄의 가즈브나비(Ghaznava), 인도의 아그니(Agni)-2가 외국의 지원에 의해 완성된 미사일이다. 이 중 사하브-3과 가즈브나비 미사일은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기술지원에 의한 것이다.<sup>39</sup> 특히 북한은 중동, 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38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Foreign Missile Developments Through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2015," (hereafter cited as Foreign Missile Developments) September 1999.

39 Richard D. Fisher, Jr., "Time to Stop North Korea's Missile Blackmail,"

대상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와 미사일 부품·물질, 전문적 기술을 수출해 왔다. 미국은 북한이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법무기를 밀매해 온 점을 주시하고 있다. 게다가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전세계에 판매하는 가장 핵심적 국가로 여기고 있으며, 테러국가와 비테러국가 등 많은 국가들과 다년간 거래해 온 점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관련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에 제동을 걸고자 하며,<sup>40</sup> 관련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의 미사일 거래를 금지시키

---

*The Heritage Foundation Executive Memorandum*, no. 550 (September 1998).

40 그러나 이는 결코 쉽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거래를 저지하기 위한 검문·검색에 나서기 어려우며, 무기 수송 의심 선박에 대해 정선·수색을 하더라도 스커드 미사일을 압수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미사일을 신고 예멘으로 향한 북한의 선박을 스페인 군함이 나포한 적이 있으나, 국제법상 법적 근거가 미비해 미사일을 압수하지 못한 채 예멘행을 허용한 바 있다. 또한 미사일을 적재한 항공기에 대한 영공봉쇄는 해상봉쇄보다 동맹국과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제약요인이 많다. 북한과 영공통과협정을 맺은 국가가 자국을 통과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항공기를 강제 착륙시키기 어려우며, 북한이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상공을 이용할 경우, 관련국들의 절대적 협력이 필요하나 이 역시 쉽지 않다. 더군다나 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CR)에 가입해 있지 않아 이 규정에 따라 북한의 선박 정선을 위해 조치하기 어려우며, 북한을 제재할 근거도 없다. MICR은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과 관련, 부품·기술에 대해 제3국 수출과 국가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1993년부터 대량살상무기의 운반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와 무관하게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허부지침을 채택, 적용범위를 넓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막는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에도 북한이 참여하지 않

고자 한다.<sup>41</sup>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을 위해 미국은 테러지원국가들의 무기수출을 차단하고자 한다. 여전히 전 세계 테러조직망이 테러지원국가들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를 테러조직들에게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전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조직의 손에 넘어가고 이들이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테러리즘의 대형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을 가지고 있다.<sup>42</sup> PSI는 불법무기를 싣고 간다고 판단되는 의심스러운 항공기나 선박을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검색·압수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 구상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방사물질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방사물질과 미사일 부품 등을 실었다고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

---

아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수출을 저지할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행동강령은 국제법상 강제력과 위반국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41 국제법적 제한이 있다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이 테러조직이나 테러국가로 향할 경우, 미국은 유엔헌장 51조에 명시된 자위권과 유엔안보리를 통과한 결의 제1373호 - 테러행위 지원 차단과 테러자금 및 도피처 제공 금지 등에 협력할 의미가 있다 - 를 근거로, 대테러전 차원에서 미사일 선적 선박을 나포하려 할 것이며, 그 뒤 선박을 회항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격침시키려 할 것이다.

42 PSI는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선박이 스페인 군함에 의해 나포됐다가 풀려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다년간 미사일 수출에 나서왔고 핵물질 밀매 가능성이 있는 북한이 PSI의 주요 대상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미사일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PSI를 구상하고 있다.

기를 수색·압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PSI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는 마약·위조지폐·불법무기 거래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불법거래를 차단하고자 한다.

특히 PSI 구상은 이슬람 과격단체, 테러조직이나 적성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 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악의 축으로 간주하는 북한이 또 다른 악의 축 해당국가이자 핵개발 의혹을 갖고 있는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며, 적성국가를 비롯한 테러조직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차단하고자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일환에서 대량살상무기 수출 봉쇄에 나서고자 하며, 그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제<sup>43</sup>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해당국의 협력을 통해 육상·해상·공중에서의 검색·저지·압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그 진행단계에 있어 미국은 국제법상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조약이나 새로운 법이 필요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갈 필요가 없는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전면 경제봉쇄에 반대하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고, 북한과 공개적인 대치 국면을 조성하는 대신 국제법 및 국가

---

43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이 밝혀진 이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마약수출 저지를 위해 우방국들과 비공식적으로 협력해 왔다. 2002년 12월 스페인과 협력해 이라비야해에서 미사일을 탑재한 소산호를 억류한 뒤 풀어준 바 있다. 2003년 4월 호주와 협력해 헤로인을 탑재한 북한선박 봉수호를 압류·수색한 바 있다; 2003년 5월 프랑스, 독일과 협력해 신경가스인 타분의 생산에 전용될 수 있는 시안화나트륨(약 30톤)의 대북수출을 저지한 바 있다.

들의 현행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일환에서 미국은 우방국들이 국내법을 정비, 자국의 영해, 영공에서 의심스러운 선박을 정선·검문·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우방국들의 협조를 통해 마약밀매 및 위조지폐 거래 등을 차단하려 한다.

## 2. 신속배치전력 강화

미국은 전 세계에 60개의 동맹국과 6개 대륙에 걸쳐 안보동반자를 가지고 있다. 그들과 더불어 미국은 언제든지 최소한 한 곳 이상에서 분쟁을 겪어야 한다. 지역분쟁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신속배치전력 강화 전략에 근거해 승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분쟁해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전력 강화는 미국이 더 이상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 수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전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이유 외 미국은 테러리즘에 신속하게 대처하려 한다. 지구상 어디가에 테러리스트 훈련장이 있고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수 개월이나 한 달씩 준비를 할 수 없다. 때문에 미국은 몇 시간 안에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신속배치전력을 강화하려 한다.

특히 미국은 전력투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미국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첨단무기의 개발로 미군의 기동성이 매우 민첩하게 이루어지고, 중국, 북한 등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들이 바다를 끼고 있어 육군보다는 해·공군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외기지 및 전방배치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력투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sup>44</sup>

이와 동시에 미국은 정보화, 첨단화, 기동화를 통해 최강의 군사력의 보유하려 한다. 스텔스 폭격기, 무인항공기, 잠수함 등 공군과 해군의 장거리무기 의존도를 높이며 첨단무기 중심으로 전력 기동성을 경량화하려 한다. 디지털·정보·사이버 시스템에서도 우위를 확보해 정보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모든 군사 작전에 정보력과 첨단기술을 동원하고자 하며 거기 에다 기동력을 살려 적을 순식간에 제거하려는 것이다.

2001년 「국방정책 검토보고서」는 불확실성과 기습전에 대비하고 신속 배치전력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본토 방어, 침략국 적대 행위예방, 제한된 기간의 국지전 참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안에 미 국방부는 억제 강조, 억제 실패시 공격에 대한 확실한 대가, 신속한 전투와 승리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 동 보고서는 대규모 동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윈-윈」(win-win) 전략을 폐기하고 한 개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현상을 유지한다는 「윈-플러스」(win-plus) 전략으로 수정하였다.<sup>45</sup> 현실적으로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감당하기는 군사공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다.<sup>46</sup> 또한 새로운 전략은 win-win 전략이

44 미국은 신속배치전력 강화에 따라 상비군의 규모를 냉전 당시보다 거의 절반인 145만 명 정도로 줄였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25만 명, 부시 행정부 시절 50만 명을 감축한 결과이다.

45 이라크전에 임했던 미 국방부는 북한과 이라크를 겨냥, 두 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이라크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핵문제를 야기시켰다. 미국이 이라크전과 북한전을 동시에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의해 평양지도부가 핵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다. 한편 미국은 동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긴급한 지역에 우선적 군사적 비중을 두되 다른 전장에서도 군사적 개입을 통해 전승한다는 것이다.

육군 위주의 재래식 전쟁에 적합한 것으로 해·공군의 역할이 중시되는 디지털·정보·사이버 전쟁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정보의 고도화를 통해 신속배치전력을 강화하려 한다. 미국은 새로운 전쟁에서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중시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전쟁전에 CIA를 통해 정확한 정보수집에 나섰다. 이를 통해 「탈레반」(Taliban) 정권 및 후세인 정권 제거에 나섰다. 이러한 접근은 무형의 전쟁을 통해 전승하려는 것이다. 실제 무형의 전쟁이나 덜 싸우고 이기는 전쟁은 유혈의 전쟁과 대규모 희생이 수반된 전쟁보다 엄청난 군사적 실리를 가져다주며 피해를 최소화하게 한다.

무형의 전쟁이 힘들 경우, 미국은 속전속결로 상대를 제압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최장거리 작전에 적합한 무기를 동원하고, 전례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키며, 정보를 통해 지상·공중·우주에서 수집된 기가바이트 양의 목표물을 강타하고자 한다.<sup>47</sup> 이렇게 정확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한 군사전략은 전쟁지역의 미군뿐만 아니라

46 가능성이 극히 적기는 하지만 미국이 중동의 주요 적성국가나 북한과 같은 지역분쟁에 전투력을 동시에 투입할 경우, 양쪽 모두 50만 명의 병력을 파견해야 한다. 또한 전투기 56대가 실린 항공모함 4~5척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11척의 항공모함중 작전투입이 실제로 가능한 항공모함은 7~8척에 불과하다. 비록 신무기 개발과 전자전 능력이 향상되어 있다고 하나 두 전쟁에 동시에 개입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 수송선과 수송기 동원에도 한계가 있고 첩보기, 공중급유기 등 지원시스템 확보와 조기경보 및 통제체제, 공중 지휘시스템, 전자전 장비 등 첨단장비 공급도 부족을 겪을 것이다. 또한 수송능력의 분산으로 두 전장에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두 전장에서 미국이 승리는 하겠지만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47 Thomas E. Ricks, "Bull's Eye: Pinpoint Bombing Shifts Role of GI Joe," *Washington Post*, December 2, 2001.

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군 편제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한다. 미국은 해외미군이 전 세계에 너무 얇고 넓게 주둔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신속배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은 해외기지에 보다 많은 장비를 배치하고 수송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을 줄이는 대신 기동성과 화력을 크게 향상시키려 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분쟁지역에 신속히 배치하고자 하며, 초군사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해외 주요 군사기지를 재배치하려 하며, 해외주둔 전력과 기지를 신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 세계 어디 곳이든 미국의 걸린 분쟁지역에 미군을 쉽게 파병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 예방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전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테러리스트, 적대국 및 잠재 적국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적대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이 신속히 공세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적으로부터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기 전에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선제공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기지를 구분해 재배치하고자 한다.<sup>48</sup> 그것은 첫째, 우선적으로 미 본토와 괌 등 영구 전략 「중추 기지」(hub bases)이다. 둘째, 소규모 병력과 장비를 주둔시키는 「전진작전 기지」(forward operating bases)이다. 셋째, 병력을 주둔하지 않는 대신 비상시를 대비해 기지 사용협정을 미리 체결하는 「전진작전 지역」(forward

---

48 Vernon Loeb, "New Bases Reflect Shift in Military," *Washington Post*, June 9, 2003.

operating locations)이다. 이에 따라 광 같은 미 영토와 영국, 일본과 같은 핵심 우방국가 지역에는 영구적인 중추기지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독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주요 기지에 대해 선 소규모 지원기지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는 영구적 대규모 해외 미군기지를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기지로 대체하면서 「전진작전 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로부터 대규모 미군기지를 축소하고자 한다. 이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군을 철수했고,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주둔한 미 2사단 병력을 후방으로 이동하기로 확정하는 등 해외미군 재배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독일에 대해선 6만 명의 독일주둔 미군 소수만 남기고 상당수를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미국은 새롭게 설치할 전진 작전기지로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3개국과 호주, 필리핀 등 태평양 국가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전략적 허브에서 분쟁지역으로 병력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과 중동 각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기지사용 협정을 체결해 비상시에 대비한 전진작전 지역을 여러 곳에 만들 방침이다. 이와 같은 구상은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의 미군기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손쉽게 승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미군은 미군기지가 없던 쿠웨이트, 카타르 등과 기지사용 협정을 체결, 그 곳의 기지를 사용해 전쟁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전진작전 지역」이나 「대기 지역」(staging areas)을 한 축을 이루게 하고자 한다. 이들 지역은 유사시 상대국의 허락을 얻어

미군이 신속하게 주둔할 곳이며 사전에 사용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평시에는 활용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sup>49</sup> 미국은 이라크 남북 비행금지 구역을 감시하기 위해 10여 년 이상 사용해 온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의 공군기지에서 철수하기는 했지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등지에 이미 전진작전 기지를 구축하였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전진작전 기지나 전진작전 지역을 구축하는 것이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이라크전을 통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카타르의 군사기지를 사전에 건설하지 않았더라면, 터키가 자국 영공 사용을 금지시킨 전투 초기에 작전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배치전략은 미 군사기지의 전략적 벨트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군사적 목적과 함께 정치경제적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군사작전에 수반되는 전투장비나 물자를 세계 여러 지역에 위치한 미군기지와 우방국 기지에 전진배치해 즉응태세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미군의 대응시간을 수 개월에서 수 일 또는 수 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세계 어느 분쟁지역에도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를 전략적 중심의 축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주변 군사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와이 소재 기존 「태평양사령부」(PACOM)에서 「동북아시아령부」를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전력운용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일본과 한반도 및 대만해협 등을

49 Loeb, "New Bases Reflect Shift in Military."

동북아 사령부가 관할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에 맞서 미국과의 군사적 협조를 도모하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며, 세계경제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 3. 선제공격

부시 행정부는 방어의 개념을 넘어 공세적 안보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선제공격안으로 나타나며 「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sup>50</sup>을 통해 보다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자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미국이 '선제공격'(pre-emptive)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선제공격안은 미국의 전쟁관이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선제공격이나 기습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제공격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냉전시 미국은 구소련을 대상으로 실질적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선제공격에 나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선제공격안을 부각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미국의 군사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영변 핵시설 공격을 계획하였다. 그 당시는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 역시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50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17, 2002.

선제공격안은 그 동안 안보정책의 근간이었던 적성국가에 대한 ‘억지’(deterrence)와 ‘봉쇄’(containment) 대신 힘의 우위와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 냉전시 일단 공격을 받으면 상대가 대량보복을 할 것이라는 위협을 통해 안보를 유지했던 억지의 논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이 없는 테러조직들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지와 함께 부시 행정부는 지금의 새 시대에 테러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만이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sup>51</sup>이라 본다. 그 길에는 선제공격과 같은 적극적인 태도로 유형과 무형의 적들에 맞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적대국가의 공격을 저지·격퇴하려 했던 미국의 군사정책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으로 미 국민과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주저 없이 독자적으로 선제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선제공격은 상대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며, 위협이 직면하기 전에 선제행동에 나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제공격안은 대이라크전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 대이라크전<sup>52</sup>은 기존의 억지와 봉쇄 군사전략을 무색하게 하면서 미국의 힘과 군사

---

51 Bush's Speech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t West Point, June 1, 2002.

52 대이라크전을 통해 미국의 오랜 원칙들이 적용되었다. 그들은 “싸울 때는 한 두 개 동맹국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원칙들을 고수하였다.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전쟁을 함께 치른 최대의 동맹국 영국과 함께 전투에 임했다. 그리고 일방주의를 버리고 동맹과의 연합을 강조하였다. 그 일례로 이라크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재대상에 속했던 파키스탄을 우방국으로 포섭하는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격적으로 전술적 동맹을 체결하였다. 또한 대이라크전을 반대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선 경계를 보이고

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테러대참사를 겪었던 미국이 자국을 위협하는 세력의 적대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선제공격에 나섰던 것이다. 유엔현장은 어떤 나라로부터의 도발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한 무력사용과 위협을 불법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테러지원국가이자 악의 축의 국가로 간주하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비확산의 명분과 함께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는 또한 테러조직들을 비밀리에 후원해 왔다고 여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sup>53</sup>

또 다른 적극적 공세는 미 국방부가 2002년 1월 8일 의회에 보고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sup>54</sup>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불량국가로 간주하는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을 유사시 핵무기 사용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을 잠재 위협국으로 간주하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시 핵공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윌포위츠(Paul Wolfowitz) 미 국방부 부장관이 장래 미국의 최대 군사적 위협 국가로 북한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를 NPR에서 재강조하였다. NPR에는 생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저장

---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테러전을 계기로 목표에 의해 동맹을 결정짓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맹에 의해 미국의 목표가 결정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동맹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53 이라크가 알 카에다 테러조직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발언은 대이라크전을 대테러전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부시 행정부의 전쟁명분을 약화시킨 바 있다.

54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Submitted to Congress on December 31, 2001; Department of Defense, "Special Briefing on the Nuclear Posture Review," January 9, 2002.

하는 지하시설과 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개발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이란의 지하시설이 전술핵무기 사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만과의 분쟁시 중국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함께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구상은 비핵국가가 핵보유국가와 연대해 미국을 공격하거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이 핵공격에 나서지 않는다는 소극적 보장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그 구성의 첫 단계로 부시 행정부는 폭발력 5kt 이하 소형 핵무기 금지 법률을 폐기하기로 결단하고 벙커 버스터(bunker buster) 핵탄두 등 핵무기 개발 예산 집행안을 미 상원 세출소위원회에서 2003년 7월 15일 통과시켰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소형 핵무기 연구비가 포함된 4013억 달러 규모의 2004회계연도 국방예산 수권법안에 서명하였다.

소형 핵무기는 수백kt 급의 전략 핵무기와 달리 전술 핵무기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은 지하시설 등 특정 목표를 파괴하는 신형 핵무기로, 벙커 버스터에 장착할 경우, 생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저장하는 지하시설과 요새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불량국가로 간주되고 대량살상무기 지하시설 및 요새를 가지고 있는 북한, 이란 등이 전술 핵무기 사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해외미군의 재배치는 신속배치전력의 극대화의 목표와 함께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북한, 중동,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불안정 지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배치는 냉전체제 종식 이후 출현한 테러집단과 잠재적 적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구사한

다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재배치는 주로 테러 조직, 대량살상무기 보유국, 잠재적 적대국 등을 상대로 계획되고 있다.

또한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거나 확장하려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카타르, 불가리아, 키르기스스탄, 미국령 괌 등에 미군기지를 건설하거나 확장하고자 한다. 미국은 테러위협이 특정지역이나 대륙을 초월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기지들은 테러리스트나 생화학 및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군사 기지장은 남반구의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부터 북아프리카를 거쳐 중동 지역과 동남아 지역에 이르는, 이른바 ‘불안정 궁형(arc of instability)’이라고 부르는 전략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sup>55</sup> 또한 이러한 기지는 미국의 선제공격 독트린 실천의 주요 거점이 될 것이다.

#### 4. 우주공간의 무기화

21세기는 해양력을 장악했던 국가가 세계를 장악했던 과거와는 달리 우주를 장악한 국가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아날로그 시대는 아니다. 세계는 이미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시대는 곧 바로 우주시대와 연결되고 있다. 나날이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은 지상·해상·항공의 범위를 넘어 우주 분야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재 600여 개인 위성은 2010년 경에는 2,0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상업용 위성이 대부분이지만 이는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

55 Loeb, "New Bases Reflect Shift in Military," June 9, 2003.

군사용과 관련, 위성은 지상의 특공대 병력이 해군과 공군 조종사에게 위성으로 유도되는, 목표물에 대한 협조 정보를 보내는 한편, 공군의 무인 정찰기 프레더터(predator)가 목표물을 가리키는 레이저 지적기(laser designator)를 활용해 해군 전투기에 목표물의 위치를 알려 줄 수 있다.<sup>56</sup> 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는 출격후 30분 이내에 어떤 목표물도 폭격할 수 있는 무인 우주폭격기 X-33(venture star)를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 폭격기의 비행고도는 기존 폭격기보다 최고 10배, 항속은 15배 가량 빠르며, 로켓발사 원리를 이용해 고도 96km의 대기권 밖을 장거리 미사일처럼 비행한 뒤 목표물을 폭파한다.<sup>57</sup> 따라서 어떠한 방공망으로도 격추시키기 어렵다. 이 외 미 국방부는 레일 건(rail gun), 다기능 전투위성, 극초음속 유도무기 등 운동성 에너지무기와 고에너지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 중성 입자빔(NPB) 등 지향성 에너지무기 등 첨단우주무기를 개발하고 있다.<sup>58</sup>

이는 위성을 활용한 전투의 본격화를 예고하는 것이며, 이를 잘 활용하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미래의 전쟁에 승리하

56 Ricks, "Bull's Eye," *Washington Post*, December 2, 2001.

57 우주폭격기 구상은 1960년대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오이겐 상거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총통에게 로켓처럼 우주공간을 날아가 미국 뉴욕을 폭격할 수 있는 전투기 '실버 버드(Silver Bird)'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10억 달러를 들여 록히드 마틴사와 함께 추진해온 이 폭격기 개발 계획을 기술적인 문제와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최근 군 현대화 계획의 하나로 이 폭격기 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Los Angeles Times*, May 28, 2001.

58 『연합뉴스』, 2003.5.12.

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우주공간에서 무기 경쟁과 무기화를 방지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미국의 전력구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미 국방부는 폭격 대상이 지구상에 있는 만큼 우주공간을 무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우주공간의 무기화로 가는 길이다.

우주시대에 대비, 미 국방부는 탄도탄 탐지, 추적 위성 분야에서부터 위성방어 계획, 군사통신, 첩보수집, 우주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한 우주 방위전략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우주에서 군사 및 민간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 같은 활동은 새로운 도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촉진하기 위해 취약점들에 대해 보다 세밀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sup>59</sup> 있음을 주지하면서 우주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그것은 즉, 육지, 바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의 상업용-군사용 위성이 기상 적국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 전역이 ‘우주의 진주만’(Space Pearl Harbor)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언젠가는 우주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와 함께 출발하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주도적인 우주국으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의 군사화-무기화 작업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연계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그것은 미사일발사에 대한 조기경보를 위성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상대국의 군사 및 첩보위성까

---

59 Remarks by Donald H. Rumsfeld on “Secretary Rumsfeld Outlines Space Initiatives,” May 8, 2001.

지 공격할 수 있다. 이는 미사일방어체제의 주 목적인 상대의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상대의 우주전력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미 국방부는 탄도탄 탐지, 추적 위성 분야에서부터 위성방어 계획, 군사통신, 첩보수집, 우주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한 우주 방위전략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주에서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공격용 위성무기(antisatellite: ASATS)<sup>60</sup>를 개발·배치하려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사일방어체제의 일종인 우주공간 레이저(space-based laser: SBL) 6~24기를 2010년까지 배치하려 한다. 그것은 우주공간에서 군사기지로 작동함과 동시에 상대국가의 군사위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기상 적에 대해 위성 레이저로 적의 탄도탄 미사일을 추적·파괴할 수 있고 적의 위성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 이러한 우주전략을 통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우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 한다.

## 5.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미국은 상존하는 위협이 냉전시대보다 더 분산되어 있다고 본다. 테러조직이나 테러지원국가들로부터의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그러한 위협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냉전시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은 예상가능한 것이었으나 새로운 위협은 예측불허하다.

---

60 자세한 설명은 Tom Wilson, "Threats to United States Space Capabilities," Prepared for the Commission to Assess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Spa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Department of Defense Studies, 2000, p. 15.

이러한 예측불허성이 미 본토의 방어태세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것은 지상, 해상, 공중에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상이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할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하며,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려 한다.<sup>61</sup>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처해 있는 세계에서, 안전을 찾을 유일한 길이 행동의 길<sup>62</sup>임을 분명히 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이나 불량국가로부터의 미사일 공격과 실수로 발사된 미사일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MD 체제 구축에 나서고자 한다.

그것은 공격력과 방어력을 토대로 한 새로운 개념의 억지력에 기초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미 영토와 해외전진 배치 군사력과 미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한 적으로부터의 우발적, 의도적, 제한적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이들 적으로부터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sup>63</sup>

보다 구체적으로 MD 체제는 적국 또는 상대자가 미국과 우방 동맹국을 향해 미사일로 공격에 나설 때 이를 미리 감지해 공중에서 미사일을 요

61 Remarks by the President to Students and Faculty a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y 1, 2001.

62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New Strategic Framework," Remarks by President George W. Bush at West Point Military Academy, June 1, 2002.

63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NSC-1, U.S. Policy on Ballistic Missile Defence and Related Arms Control Issues, February 1, 2001. Web: [www.whitehouse.gov](http://www.whitehouse.gov).

격할 수 있도록 지상, 해상, 우주 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이며, 저속 항공기와 고속 및 고공 탄도 미사일, 저공 크루즈 미사일 등 모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주 공간이 항공기와 미사일이 사방으로 날고 인공위성이 그 위에서 떠돌고 수십 대의 레이더가 중첩된 신호를 보내는 현대의 전쟁터 상공과 우주 공간의 다중적 위협으로부터의 대비를 위한 것이다.<sup>64</sup> 따라서 MD가 제대로 작동되면 상대의 미사일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형 무기체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MD의 핵심내용은 미사일방어체제 추진, 「탄도미사일 협정」(Anti-Ballistic Missile: ABM) 무용론, 핵무기 감축, 우방·동맹국과의 공조 등이다. MD 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은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ABM을 러시아와 협상 끝에 2002년 6월 13일 공식 폐기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러시아와 핵탄두 감축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는 MD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한다.

MD 체제 구축 과정에 있어 미국은 그 동안 여덟 차례의 미사일 요격 시험을 실시하였다. 세 차례(1999.10.3, 2000.1.19, 2000.7.8)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그 뒤 다섯 차례(2001.7.18, 2001.12.3, 2002.3.15, 2002.10.14, 2002.12.11)는 부시 행정부 시절에 실시되었다. 이들 시험은 모조탄두를 격추하는 요격시험에 해당된다. 시험중 1차, 4차, 5차, 6차, 7차 시험은 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2차 시험은 요격운반체(exo-atmospheric kill vehicle: EKV)<sup>65</sup>가 적외선 센서의 이상으로 목표물을 빗나가 실패했다. 이어 실시

64 *Washington Times*, June 25, 2003.

65 EKV로 명중도를 높이는 것은 요격시험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3개의 거울과 2개의 적외선 센서시스템을 갖춘 망원경, 컴퓨터 연산장치, 별에 의한 항법광학 장치, 지상레이더로부터의 데이터수신 안테나, 센서냉각을 위한 극저온 냉각장

된 3차 시험에서는 요격체가 추진로켓에서 분리되지 않아 실패했다. 그리고 8차 시험에서는 요격미사일의 탄두가 추진로켓에서 분리되지 못한 채 목표물로부터 수백 마일 벗어난 대기권에서 연소하고 말았다.

이러한 시험과 함께 미국은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Fort Greely)에 장거리 요격 미사일용 지하 격납고 6개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200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 외 그릴리 인근 페어뱅크스(Fairbanks)와 코디아크(Kodiak) 섬에 요격미사일 사일로(silo)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유사시 기본적인 미사일 방어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2004년까지 기본적인 장비 개발 및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며 장거리 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미사일 원형(prototype)을 알래스카 기지에 배치하고자 한다. 그것은 상하층 방어체제로 구성되는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지상, 해상, 공중배치와 함께 우주배치 방어체계를 통해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요격 미사일은 레이더, 우주기지의 감지기(spaced-based sensors), 전투 통제 컴퓨터(battle-management computers)들에 의해 유도되어 파괴체를 우주에 쏘아 올리며, 이 파괴체를 적의 탄두를 식별해 분쇄하도록 되어 있다.<sup>66</sup>

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는 장거리 미사일 궤도를 추적하기 위한 해상

---

치 및 소형컴퓨터 등 각종 최첨단 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EKV로 원추형 모양의 미사일 핵탄두를 파괴시키려면 목표방향과 충돌 행로 등을 정확히 측정하고 모든 기기를 수백만 분의 1초 정도로 정밀하게 조종해야 하나 이 역시 어렵다. 『연합뉴스』, 2002.3.27; *New York Times*, May 2, 2001 참조

66 "2005 Missile Defense Inception Is at Risk," *Washington Times*, August 9, 2000. 추진로켓은 날아오는 탄두를 요격하는 데 필요한 빠른 속도를 얻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배열이 필요하고 그 배열에서 기존의 모터와 결합이 되어야 하나, 다양한 요소의 통합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지스(AEGIS) 레이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상대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또한 미시일이 발사된 직후 이를 요격할 수 있는 공중 레이저 체제와 다층성 미사일방어체제 배치를 2008년까지 완료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미국의 MD 계획에서 나타나듯, 그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개발이 주 이유가 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이나 불량국가들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한 대책의 일환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대포동 1호가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한다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미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대륙간 운반이 가능할 것이며, 더욱 성능이 우수한 2단계 대포동 2호가 개발되면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본다.

이란의 미사일개발 역시 MD 체제 구축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란은 2001년 5월 31일, 2002년 9월 6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며 사거리 300~400km에 이르는 파테(Fateh)-110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 시험발사한 바 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얻어 대포동 1호 위성발사체나 3단계 대포동 2호 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몇 년 안에 시험발사할 수 있다고 본다.<sup>67</sup> 그러나 일부 정보 분석가들은 이란의 경우, 2015년까지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MD가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 믿기는 어렵다. 미국 역시 이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자신을 가지지

---

67 NIC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이란을 대륙간 탄도탄 능력 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라크전 이후 특히 북한과 이란을 주시하고 있다.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Foreign Missile Developments," December 2001.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한 불완전성이 공격에 대한 억지력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잠재적 적국들에게 미국의 불완전한 방어체제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불량국가의 미사일 설치를 단념하게 할 수 있다<sup>68</sup>는 억지력 효과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MD 체제 구축이 엄청난 비용을 소요하게 할 것이지만 “비용은 안보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가치를 가지게 되며, 기술이 발달하면 방어 보장과 함께 비용도 그만큼 절감될 것”<sup>69</sup>이라는 판단과 함께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요컨대, 미국은 북한·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로 간주되는 국가들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새로운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며, MD 체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고자 한다. 더불어 미국은 핵·미사일 및 그 운반수단의 전면적인 확산으로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 방어 체계 및 여타 관련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

68 [www.clw.org/clw/transition2000/runsfeldhearing.html](http://www.clw.org/clw/transition2000/runsfeldhearing.html).

69 정항석, 『미국패권의 이해』 (서울: 평민사, 2001), p. 44.

## IV. 주요 국가 및 지역의 대미 협력과 견제

### 1. 중국

중국은 탈레반 세력과 테러조직에 대한 주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 미·중간 새로운 협력환경을 창출해 내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접근 양상을 바꿔 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대테러전에 동의하였다고 해서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자가 되려는 야망을 접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미국은 중국이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처럼 아시아 전체를 위협하는 군사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연계해 중국위협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론에 대해 중국은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대체하려는 세력으로 부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중국은 아직 군사적으로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중국은 미국과 구 소련의 군비경쟁의 결과를 잘 기억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중국이 합류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중국은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면서 미래의 경제대국을 꿈꾼다. 더군다나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의 대중 시각, 즉 중국은 “위험하고, 침략적이며, 호전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미국이 중국을 “분열시켜 약화시킨 후 미국에 도전 못하게 하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개입<sup>70</sup>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이데올로기적 개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중국은

70 이상우,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 오기평 편, 『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 (서울: 오름, 2000), p. 227.

이념적 차원에서 미국과 대립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추구하는 미국의 세계관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 중국은 쿠바, 북한 등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대표적이다. 비록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당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 1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내부 안정을 위해서 공산당 지배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체제를 유지시키고자 한다.

또한 중국인들은 중국의 불안정한 요소 - 사회적 불안정, 인구문제, 식량문제, 빈부 격차, 자원·자본의 부족, 낮은 기술 수준, 열악한 사회간접 자본시설, 국유기업 문제 등 - 로 인해 발생될 위협까지 염두에 두는 미국의 경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불안정한 요소가 연쇄적으로 터져 나올 때, 중국지도부는 국내적인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외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거나 대외적인 팽창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sup>71</sup>는 미국의 지나친 우려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중국이 강대해져서 오는 위협과 함께 불안정해서 발생될 위협까지 염두에 두고 중국을 경계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사고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초강대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의 힘의 외교를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현실주의 외교와 힘의 논리에 의한 국제정치를 내세워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중국은 상호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미국과의 경제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

71 Jing-Dong Yuan, "Studying Chinese Security Policy: Toward an Analytical Framework,"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8, no. 1 (Spring/Summer, 1999), pp. 138~139.

적 국제주의나 힘의 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러한 현실 하에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안보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미국과 대결보다는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향상시켜 점진적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항하고자 한다. 중국 혼자의 힘으로 되기 어려우면 주요 지역강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맞서려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 중국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저지하고자 한다. 아시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에 도전하고자 한다.<sup>72</sup> 이와 함께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역할에도 도전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이 신 안보체제를 기본 축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폭넓은 안보협력을 추진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데 대해 저항적 태도를 보여 왔다. 또한 중국은 미·일, 한·미 안보동맹이 역내 안정의 초석이 아니라 위협 요소라 여기면서 미국 및 역내 미 동맹국의 입장과 완전 배치되는 대아시아 안보관을 보여 왔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안보동맹이 중국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려 하면 러시

---

72 Philip P. Pan, "China's Improving Image Challenges U.S. in Asia," *Washington Post*, November 15, 2003.

아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접근으로 중국은 지역안보를 위해 자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된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주장해 왔다. 그렇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러시아-중국-인도 삼각 안보동맹에 대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지역안보체제로 이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의 MD 체제 구축이 궁극적으로 세계안보를 좌우한다고 보고 이를 절대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 이유를 들자면 첫째,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미사일방어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군사적 공격과 방어의 동시 효과를 최대한 누린다면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절대 우위로부터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둘째,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중국은 2002년 12월 미사일 다탄두화 실험에 성공하였다. 이는 미국이 동아시아에 MD 구축을 가속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조치이다. 중국은 2~3년 내에 장거리 ICBM에 다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핵잠수함 탑재도 4~5년이면 가능할 것이다.<sup>73</sup>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저항도 수준이나마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면서 미국의 힘의 정책과 패권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결보다는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대신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부시 행정부에 정면으로 맞서 대결구도를 형성하기보다는 실리 차원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러한 과정이 중국의 발전에 일

73 『讀賣新聞』, 2003.2.8.

조한다고 보며 이를 가속화시키려 한다.

## 2. 러시아

신국제질서하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리는 공유한 가치를 추구 하면서 미국의 이상에 동참해 왔다. 러시아는 미국이 이끄는 정치·경제·안보 체제에 동참하면서 서방세계로 편입하려 하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마·러의 기업의 공동사업 촉진, 대미 채무면제 등을 기대한다. 이러한 것들 모두 러시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과 군비감축에 나서면서 안보협력을 유지해 왔다.<sup>74</sup> 그 일환으로 러시아는 미국과 협력하여 2백 톤이 넘는 핵 물질을 무력화<sup>75</sup> 시킨 바 있으며, 핵탄두 감축에도 동의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2002년 11월

---

74 한편 러시아는 미국이 군사적 차원에서 자국을 견제해 온 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져 왔다. 테넷(George Tenet) 미 CIA 국장이 러시아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확산의 진양지로 의회에 보고(2002.1.6)함으로써 러시아의 반발은 표출되었으며, 러시아는 관련사항을 부인·반발하면서 미국에 공식적 해명을 요구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무기기술 확산을 통해 국방산업의 자금을 충당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미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를 자극시킨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주 대상이 러시아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그 다음 핵강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핵공격을 시도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보고서 내용에 역매여 미국과 신경전을 벌리기보다는 오히려 핵감축을 통해 군사적 긴장기류를 녹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75 Karl F. Inderfurth, "Leftovers From an Old War," *New York Times*, November 7, 2001.

25일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막는 새로운 국제규범이 될 「국제 미사일 행동 규약」(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ICOC)에 서명한 바 있다. ICOC는 국제법상 강제력이 없으며, 위반국가에 대한 제재수단도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국제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추가적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대량살상무기의 운반 수단을 다루고자 하며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지상군이 전투를 치르는 것을 전제로 구성된 구 소련의 전략을 포기하고 대신 지역 방위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려 한다. 더 이상 세계를 상대로 전투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주요 전략적 방면의 전투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가장 문제시되는 지역으로 이슬람 과격세력의 위협이 커지는 중앙아시아와 남서부 국경지역에 대한 전투수행 능력을 고양시키려 한다.

외교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테러참사이후 조성되고 있는 미-중, 마-러, 중-러의 새로운 형태의 외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 한다.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를 추구해 왔으며,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왔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유럽보다는 남쪽의 체첸과 동쪽의 중국이 더 위협적이라 보고 있으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마-일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일환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아울러 러시아-중국-인도의 삼각 안보동맹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실리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을 넘나드는 외교정책을 구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외교방식과 함께 러시아는 다른 지역국들과 양자적 또는 다자적 제휴관계를 모색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불평

한 사이에 있는 사우디와 관계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이란과는 핵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는 중동 지역에서 자국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려 한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시 인과 핵동결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을 여러 잣대를 근거로 대하려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한편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 왔다.

러시아는 테러적결에도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소수 민족인 이슬람교도 문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테러문제가 중앙아시아로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들은 독립을 위해 대정부 테러리즘을 마다하지 않는 체첸테러조직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러시아는 9·11 테러사건이후 미국의 반테러 대응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었다.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미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기지 사용에 대해서도 협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전이후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힘을 바탕으로 독주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해 왔다. 미국이 그루지아와 이라크에 대해 대테러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였다. 구소련 소속으로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 있는 국가인 그루지아에 미국이 대테러를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려는 데 대해 러시아가 크게 반발한 것이다.

더군다나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에 거부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일례로 러시아는 미국의 대이라크전 유엔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었다.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이후, 러시아는 자국 석유회사들이 이라

크 정부와 합의한 유전개발권을 상실할 수 있고, 이라크가 석유생산량을 늘릴 경우, 러시아경제는 유가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계획을 강력히 반대해 왔었다. MD 구축이 한편으로는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 균형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염려에 의해서다. 러시아는 미국의 ABM 탈퇴에 대해 강력히 반대<sup>76</sup>해 왔으나 협상을 통해 미국의 ABM 탈퇴(2002.6.13)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렇게 러시아가 입장을 바꾼 것은 미국과 새로운 핵군축조약에 서명함과 동시에, 양국간에 MD 추진관련 신뢰제고의 일환으로 자료교환, 실험장 상호검증,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센터 건립에 합의하는 등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sup>77</sup> 이와 더불어 MD가 국가안보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러시아 지도부의 인식전환이 작용했고 ‘전략적 안정성’<sup>78</sup> 추구라는 새로운 목표가 작용

76 러시아는 미국의 MD 계획 추진과 ABM 조약 폐기에 따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중국과 함께 외기권 군비경쟁방지를 위한 새로운 군축협약 제정을 「유엔 군축회의」(2002.9.12)에서 역설했으나 미국과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이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동해안이나 유럽에 2단계 미사일방어 요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결정(2002.12.18)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77 이현경 외,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116, 주 140.

78 전략적 안정성의 개념을 보다 광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일방의 국가가 정치·경제·군사적 또는 기타 어떤 조치들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들로 인하여 상호 군사적 침략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닐 경우이거나, 또는 군사적 침략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일방의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그리하여 서로 상대방을 침략할 의사를 가질 필요가 없을 때, 이들 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MD 체제에 대한 견제를 위해 대륙간 핵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모델인 SS-18, SS-19 미사일 보유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sup>79</sup>

이와 함께 러시아는 미국의 NATO의 확대를 반대해 왔다.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가 탈 소연방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고화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태평양공동체국가로서 러시아가 성장하는 것도 막음으로써 러시아를 고립화시키는 포위전략으로<sup>80</sup> 간주하였고, 또한 NATO의 동방확대는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로 가는 것이라 보고 이를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NATO 확대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더군다나 미국을 위시한 NATO 회원국들의 외교노력으로 태도를 바꿨다. 마침내 러시아는 신 NATO의 파트너로서 국제안보질서 구도에 동참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 판단과 함께 러시아는 『NATO-러시아 위원회』(NATO-Russia Council) 설립에 동의하였다. 이 위원회는 러시아에게 사전 협의권을 주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주 의제인 테러퇴치, 무기확산 방지, 재난구조, 지역 분쟁해결, 평화유지 활동, 공동미사일 방어망 문제 등을 협의할 시 러시아의 입장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요구 - NATO

---

나라 사이의 전략적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앞의 책, p. 61.  
79 마러 정상이 합의한 새 군축협정은 다탄두를 장착한 지상 미사일 배치를 금지한 『전략무기감축협정 II』와 달리 폐기할 무기의 종류를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러시아는 이들 다탄두 미사일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80 김경순, 『NATO 동유럽 확대와 러시아의 대응』, (경가: 세종연구소, 1998), p. 15.

가입형태 대신 새로운 기구 창설 - 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NATO가 러시아와 이해가 상충될 때 러시아를 배제할 수 있는 길도 함께 만들어 놓았다. 이로써 양국은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는 물론 새로운 동반협력관계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러시아가 미국의 MD 체제 구축, 일방주의적 외교노선, 대테러전 확대 등에 대해 경계태도를 보이고, 미국이 러시아의 악의 축 국가들과의 협력, 대이라크전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을 문제시 삼으면서 불편한 관계를 때때로 형성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마려간 대테러전 공조, 경제협력의 확대, NATO-러시아 위원회 설립, 전략무기감축협정 체결, 국제미사일 행동 규약 서명 등을 통해 양국관계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 3. 유럽

유럽연합(EU)은 대량살상무기(WMD) 반확산을 위해 미국과 협력해 왔다. 국제기구와 조약을 강화하고 WMD관련 물질 및 기술의 불법적 수출을 저지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WMD 비확산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테러척결을 위한 유럽국가와 미국의 협력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9·11 테러사건이전까지만 해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국제적인 테러 세력을 응징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테러대참사이후 유럽국가들의 대테러관은 바뀌었다. 그들 역시 테러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결국 미국과의 대테러 협조를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테러전 확대와 일방주의·독단주의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주지하듯이 일방주의는 지난 30년 동안 구축되어 왔고, 미국도 큰 공헌을 해온,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허약한 구조를 깎아 먹고<sup>81</sup> 있으며 우방국과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다. EU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가 그들의 독자노선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본다. 그 동안 EU는 힘과 군사력을 내세운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가 대화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럽의 외교와 배치되고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 이러한 일방주의에 반발, EU는 미국의 중동정책에 반기를 들었으며, 교토의 정서 발효를 주도하였다.

그 동안 EU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테러 확대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었지만 부시 행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미국이 대테러전을 계기로 이라크를 대상으로 한 확전에 반발을 보였다. 또한 그들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 대테러전 확전을 겨냥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라크는 몰라도 이란, 북한 등을 악의 축의 국가군에 넣은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견해를 보여 왔다.

특히 프랑스는 다른 나라와 협의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만의 시각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는 미국의 단순하고 일방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며 일방주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다. 그 일환으로 프랑스는 2002년 2월 7일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규정된 이란과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등 모두 78개 국의 대표들을 참여시켜 탄도미사일 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통

---

81 William Pfaff, "Empire isn't the American Wa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9, 2002.

해 프랑스는 미국이 테러대참사이후 모든 국제문제를 테러와의 전쟁으로 귀결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프랑스의 대미 반발은 미국의 대이라크전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독일 역시 프랑스와 뜻을 같이 하였다. 이들 국가는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잦은 증거에 의해 이라크전을 치룬 미국에 정면으로 나섰던 것이다.

미국의 MD 계획과 관련 유럽국가들은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MD 배치로 유럽에 대한 미사일공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국이 핵무기, 생화학무기 및 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들과 분쟁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면, 미사일방어체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유럽이 당연히 이 국가들에 의한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sup>82</sup> 특히 프랑스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그 이유는 MD의 역할로 인해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잠재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독일 역시 MD를 반대해 왔다. 새로운 군비경쟁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프랑스와 같이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독일은 미국과 함께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

NATO 역시 MD 체제 구축에 대해 회의감을 보여 왔다. NATO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미사일에 대해 공동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왔으며, 미국의 새로운 전략 틀이 극도로 애매모호하다며 급진적인 MD 계획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NATO의 존속을 필요로 하였다. 러시아뿐 아니라 통일

82 이현경 외,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p. 105.

독일을 견제해야 하는 여타의 유럽국가들로서는 NATO의 존속이 상대적으로 독일을 제어해 줄 수 있으리라 보았다.<sup>83</sup>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유럽국가들은 NATO의 가입을 희망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냉전시 예측되었던 러시아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서방세계로 편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NATO의 군사적 영역을 넓혀 나가자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반발해 왔다. 그들은 NATO와 WIO간 대립 상태가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국 주도의 NATO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첫째, NATO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둘째, NATO가 유럽, 대서양 지역 안보라는 기본 목적에서 벗어나 미국의 대외정책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셋째, 미국이 NATO를 통해 유럽의 독자적 행동을 견제할 수 있다. 넷째, 미국이 NATO를 통해 중동,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NATO의 동방확대가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을 대거 친미 성향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고 그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동방확대가 결국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NATO 동방확대를 막지 못했다. 마침내 NATO 회원국 정상들은 2002년 11월 21일~22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동유럽 7개국의 회원가입을 승인하였다. 이는 NATO의 동방확대 계획의 일환에서 추진된 것으로 마침내 동유럽 4개국과 소련영토였던 발트해 2국

83 김경순, 『NATO 동유럽 확대와 러시아의 대응』, p. 15.

의 가입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로써 유럽대륙에서 NATO의 회원국이거나 동맹국이 아닌 나라는 유고, 알바니아 등 분쟁국들과 중립국들만 남게 되었다. NATO는 이번 확대로 서방만의 협소한 군사동맹을 넘어 북미와 전 유럽을 포괄하는 대규모 집단안보체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NATO가 러시아를 제외한 과거 WTO 회원국 전부를 흡수함으로써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는 동안 프랑스와 독일은 독·불합동군에 벨기에를 더해 유럽합동군을 창설했다. 그 후 스페인, 룩셈부르크를 합류시켰다. 유럽지역에서의 미국의 주도적인 군사력에 자극받아 독자적인 군사력 통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코소보 공습에서 미국과 유럽 사이의 군사적 능력의 극심한 격차를 직감하였다. 공습에 참여한 1,058기의 공군기 중 70%에 달하는 731대가 미국의 것이었고 유럽군들은 첨단공중경보기도 없어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나게 됐다.<sup>84</sup> 이를 지켜보면서 EU는 군사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에서 EU는 유럽의 군사력 통합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방위기구 설립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는 미국 주도의 NATO와 상관없이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영국은 NATO 체제를 약화시키는 않는 유럽방위기구 설립 구상을 지지해 왔다. 이러한 지지는 유럽연합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이러한 방위정책을 통해 EU-NATO 공동 사령부 개념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NATO와의 분리를 성사시키고자 하며, 통합된 작전능력과 통합된 군사훈련시스템을 갖추어 유럽의 공동안

84 『문화일보』, 2001.4.30.

보방위를 맡고자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EU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NATO 체제에 일방적으로 흡수되어 유럽지역에서조차 군사적 주도권을 상실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유럽군사력 강화를 통해 자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그 일환에서 EU 국가들은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acility: RRF)을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군은 유럽합동군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유엔군의 평화유지 활동과 인도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RRF는 유엔 또는 지역 평화유지군이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유엔의 요청에 따라 단기적으로 상황을 안정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RRF는 NATO에 대한 의존 없이 분쟁 및 위기 지역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다. 신속대응군의 창설이 성공적이든 아니든 간에 유럽에서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의 안보 나아가 방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기제의 도입은 NATO가 주도할 수 없는 유럽 내의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또한 미국의 도움 없이도 유럽이 자립적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주목될 만하다.<sup>85</sup>

이와는 별도로는 NATO는 2004년까지 2만 1천 명의 「나토신속대응군」(NATO Response Force: NRF)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RRF와 NRF는 그 임무와 목적에서 구분이 있다. 전자는 유럽 내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반면 후자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고밀도의 전투를 수행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프랑스는 NRF가 EU의 RRF와는

85 박재복, “북-EU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유럽연합의 역할” 『북한-유럽연합 관계와 전망』 (한국세계지역학회·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2002.4.3), p. 11.

완전히 별개로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NATO와 EU의 분리를 강조함으로써 EU를 NATO의 틀 안으로 수용하려는 미국과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

이렇게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유럽군사력을 강화하려 있으며, 자체 방위 구축을 통해 NATO로부터 탈퇴하려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 독일은 미국과 함께 군사적으로 행진해 온 영국을 끌어당기려 하며 점진적으로 EU의 군사력을 강화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 4. 중동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중동 개입에 적극성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중동지역에서의 반미 감정을 고조시켰고 미국은 테러리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슬람 무장단체들과 이들을 후원하는 중동 지역의 적성국가들은 반이스라엘, 반미를 내세우면서 테러활동에 나섰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위협해 왔다. 이러한 환경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자 하는 국제질서와 이를 막으려는 국가들의 대응에 의해 조성되어 왔으며 반미·반이스라엘을 내세운 테러활동으로 인해 중동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불안정의 결과는 결국 테러대참사로 나타났다. 9·11테러의 주 원인은 서구의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미국의 일방주의가 빚어낸 데서 찾을 수 있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 지지와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미국이 쿠데타를 배후 조종한 것과 대리비아 공격 및 대이라크 경제제재조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테러는 기독교와 이슬람간 문명충돌이 아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테러리스트 및 그들의 네트워크와 문명사회와의 투쟁인 것이다.

미국은 9·11 테러사건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려 하지만 중동지역에서는 뒷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아랍권 경계는 오히려 걸프전 이후 양속관계였던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으며, 이란과 바레인도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중동의 친미국가이던 사우디, 이집트, 터키 등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려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자국내 이슬람 정치집단의 반발을 의식한 데서 비롯된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미국과의 60년 동맹관계를 흔들고 있다. 사우디 국적의 테러리스트와 그들을 후원한 기업과 개인들이 9·11 테러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확증으로부터 비롯된 미국의 조치와 사우디의 대응으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이슬람 국가들의 대미 호감도 역시 하락하였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대외원조의 최대 수혜국에 속했던 요르단, 파키스탄, 이집트의 대다수 국민들조차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등 일방주의를 예로 들어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이슬람국가들은 유럽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들 모두 미국의 힘의 외교와 일방주의를 우려하고 있으며 대테러전 확대가 대이라크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도 미국은 테러의 근원을 제거하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원활한 석유수송을 위해 대이라크전을 계획하였고 이를 강력히 밀어 부쳤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강력한 응징을 염려하게 되었고 차선책으로 대이라크 전면 무기사찰 수

용안을 내 놓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이라크는 무기사찰을 받아 들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라크의 보고내용이 은폐되어 있다고 결론짓고, 후속 대응, 즉 대이라크전에 나섰다.

그렇다고 이슬람국가들이 미국의 권위와 위상을 부인하고 정면대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국익을 고려해 행동하고자 하며 반테러를 지지하고 있다. 실제 이슬람 국가들 대부분이 테러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이슬람 57개 국 모임인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는 9·11테러사건 직후 “이슬람 전체는 참혹한 시련을 당한 미국인과 고통과 슬픔을 같이 한다”<sup>86</sup>고 선언하는 등 테러에 반대하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은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테러에 나서는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용·지지하고 테러지·지원국가들에 대해서는 적대국가로 간주 대응하려 한다. 특히 온건 이슬람국가들에 대해선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9·11 테러사건이후 중동지역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테러가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지연과 대이라크전이 이슬람 세력의 테러활동을 촉발시킨 것이다. 한편 쿠웨이트, 요르단, 레바논 등 친미·온건국가로 여겨지는 국가에서 미국인이 피격을 당했다. 이러한 사실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인과 아랍계간의 영상이미지가 상존하고 적대적으로 대할 때 역테러 또는 보복테

---

86 Secretary-General of the OIC, Abdelouahed Belkeziz's Remarks on September 12, 2001.

리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5. 북한

북한은 미국이 유엔과 국제법, 다른 나라들의 견해를 무시하는 일방주의적 노선을 견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미국을 세계에서 유일한 진짜 불량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전쟁의 사례로 들면서, “미국은 저들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유엔도, 전통적 동맹국도 인중에 없으며, 전쟁의 명분도 공인된 국제법과 규범, 국제 여론에 준해서가 저들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단정하고 그 인정을 국제사회에 강요하고 있다”<sup>87</sup>면서 미국을 혹독히 비난하고 있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군사력을 활용,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수립에 방해가 되는 대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약육강식의 피비린 칼부림”이며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다”<sup>88</sup>고 보며, 미국이 안전수호를 내세워 새 세기에 세계를 그들의 지배와 통제 밑에 두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의 자동군사개입 폐기<sup>89</sup> 및 중국의 안보공약 약

87 『조선중앙통신』, 2003.8.9

88 『로동신문』, 2003.5.25.

89 북한은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새롭게 분쟁이 일어날 경우, 자동군사개입 내용이 담긴 내용의 1961년 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우호협력조약(2000.2)을 체결하자 고도의 안보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새 조약에는 군사장비 판매와 군사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상업 차원과 방어적 군사시스템에 국한되어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협력협정(2001.4)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는 과거 소련이

회<sup>90</sup>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의 선제공격 대상에 북한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우려는 심각하다. 미국은 2002년 9월, 「국가안보 전략」을 통해 자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선제공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으며, 동년 1월 8일, 미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 소형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핵태세검토」 비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평양지도부는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누차 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적 수단이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미국이 외교적 대처 방식이란 명분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며, 미국의 강경접근이 실패로 돌아 갈 경우, 북한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 본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이라크에 대해 선제공격을 취한 것과 같이 자국에 대해서도 동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유추해 보면, 유엔사찰팀이 이라크내 대량살상무기관련 사

---

북한에 제공했던 무기들의 현대화와 북한군 인사들에 대한 러시아측의 교육지원에 관한 것으로 자동군사개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나 북러 신우호협력 협정은 한반도에서 새롭게 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규정해 놓은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빠져 있다.

90 더군다나 북한은 중국의 안보공약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이 1961년 중-북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의 내용 가운데 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조약 체결 주장에 대해 북한은 일단 거부하였으나, 그 뒤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동 군사개입조항’인 제2조는 “어느 일방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갔을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조약은 실질적인 군사동맹 조약으로 북한이 외부로부터 느끼는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 왔다.

찰을 상당 차례 실시했으나, 위배사실을 발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의 승인 없이 주도적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하였으며, 이라크전 다음의 주 공격표적으로 북한을 겨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미군의 가공할 만한 군사력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 특히 그들은 북-미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 미국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 폭발할 수 있는 Deep Digger 신형폭탄, 공대지 미사일의 개량종인 AGM-86D 등을 통해 북한의 땅속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B-2 스텔스 폭격기, F-117 스텔스 전투기, 크루즈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할 시 북한의 전력 이 마비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sup>91</sup> 게다가 꺾에 배치된 B-1, B-52 장거리 핵미사일과 태평양을 순회하는 미 핵잠수함을 이용해 북한을 향해 핵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한편 평양은 미국의 압박과 군사적 제재 태세를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압살기도라며 맞대응 자세를 유지해 왔다. 미국의 변함없는 반공화국 선제공격 기도는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조-미 사이의 군사적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sup>92</sup>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강경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와 함께 북한은 “핵 압박과 군사적 위협 공갈을 계속 강화한다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것”<sup>93</sup>이라면서 “미국의 정밀타격에도, 외과수술식 타격에도, 핵 선제공격에도 다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sup>94</sup>고 자신하고 있다.

91 이현경,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 전략과 시뮬레이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5~6.

92 『민주조선』, 2003.5.24.

93 『로동신문』, 2003.5.20.

94 『로동신문』, 2003.6.3.

이러한 맞대응 태세와 함께 북한은 핵무기 보유에 보다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인식하고 자위권과 생존권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 핵무기 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핵무장을 통해 정치적·이념적 단합을 기하고자 한다. 둘째, 상실된 소련으로부터의 핵우산에 대비하고자 한다. 셋째, 미국의 핵공격과 선제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 넷째, 핵보유국으로서 군사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다섯째, ‘핵능력’, ‘핵공갈’, ‘벼랑 끝 전략’ 등을 통해 체제보장 및 대규모 지원을 얻고자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저지하는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며, “전쟁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키는 무기는 오직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sup>95</sup>임을 역설하면서 북한의 주권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 한다.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핵동결을 약속한 이후에도 핵개발에 나서 왔다. 이는 2002년 10월 북·미간 회담에서 북측의 시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극한 상황을 초래해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벼랑 끝 전략(brinkmanship strategy)이다. 1994년의 경우처럼,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해 돌파구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때의 상황보다 지금이 더 위협적이고 심각하다. 그 때와 달리 현재는 북한이 핵보유를 시인한 바 있고 플루토늄 추출을 비롯, 우리늄 핵폭탄 제조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핵개발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을 낳게 한다. 북한이 봉인된 사

95 『로동신문』, 2003.6.2.

용된 핵연료봉 8,000여 개를 재처리해 핵개발에 나서면 4~5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문제가 평등 공정성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한다<sup>96</sup>는 입장과 함께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거듭해서 촉구해 왔다. 이러한 양자협상 주장은 미국으로부터 확고한 체제보장을 얻으려는 것이다. 세계 초군사강국으로 위치하고 있는 미국을 대상으로 핵카드를 사용해 확고한 안전보장을 얻으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의 불가침 약속은 체제보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북한은 문서서명이 아닌 미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불가침조약을 원하고 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불가침보장을 얻으려는 것이다.

핵 외 북한은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sup>97</sup> 확산에 주력해 왔다. 북한은 대량의 생물무기<sup>98</sup>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제3

96 『로동신문』, 2003.5.20.

97 자세한 설명은 이현경,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 II장 2절 다항; 정우영, “화학 및 생물무기 테러 대응정책,” 『화생무기의 국제적 위협실태 및 대처방안』 (제11회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 2001.10.12), pp. 13~50; Kyoung-Soo Kim, “North Korea’s CB Weapons: Threat and Cap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4, no. 1(Spring 2002), pp. 69~95; “Chemical Weapons,” [www.fas.org/nuke/guide/dprk/facility/cw.htm](http://www.fas.org/nuke/guide/dprk/facility/cw.htm); “Biological Weapons Program,” [www.fas.org/nuke/guide/dprk/bw/index.html](http://www.fas.org/nuke/guide/dprk/bw/index.html) 참조. 미국은 테러지원국이자 불량국가로 간주하는 북한이 생화학기체를 사용한 테러나 동 기체를 테러조직에 밀매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98 북한은 박테리아·바이러스·리켓차·섹시톡신 등과 같은 미생물이나 콜레라 페스트·탄저균·유행성 출혈열의 병원(病原) 등 전염성 작용제까지 배양 생산하고 있다. 생산능력은 연간 약 1,000톤에 달한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결정만 내리

위의 화학무기<sup>99</sup> 보유국이며, 이들 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sup>100</sup>

북한은 핵·미사일과 함께 생화학 무기로 초군사강국 미국에 맞서 대응태세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에 대한 확신과 경제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얻으려 한다.

---

면 수주일 내 군사적으로 충분한 양의 생물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99 북한은 VX-3, 사린(Sarin), 포스젠, 염화시안, 청산제, 겨자가스 등 신경성·수포성·혈액성·취투성의 다양한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다. 생산능력은 평시에 연 4,500톤, 전시에 12,000톤까지 가능하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보유중인 총 포탄의 10%, 스킨드 미사일의 50~60%가 생화학 탄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1.10.15.

100 북한이 탄두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장착한 미사일로 공격에 나설 경우 한국과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과 같이 북한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상대로 동 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같은 공격이 있을 시, 미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격용 무기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동 무기로 맞대응하겠지만, 다양한 운반수단을 통해 생화학 무기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동 무기로 맞대응하기가 실제 어렵다. Hun Kyung Lee,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and US Non-proliferation Strategy,"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4, no. 2 (Fall 2002), p. 57.

## V. 결 론

미국은 20세기 후반에서처럼 21세기에도 초강대국으로서의 헤게모니를 행사하고자 한다.<sup>101</sup> 의심할 필요 없이 21세기에 접어들어 미국은 전례 없는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적 국제주의의 이상과 일방주의 그리고 신보수주의적 사고와 함께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 한마디로 미국은 강력한 힘과 권위,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위치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미국의 헤게모니 추구를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다른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주의 노선을 추구해 많은 국가, 심지어 미국의 우방국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를 주도하던 강대국들은 줄곧 주변국들로부터 원성을 받았다. 로마제국은 피정복국들에 문명을 전해주었지만 증오를 받았다. 대영제국 역시 세계 곳곳으로부터 적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마-소가 주도하던 냉전시대에는 동-서로 나누어진 국가들이 미국이나 소련에 의지하며 국제질서에 동참했었다. 그러한 냉전의 국제질서가 무너진 뒤 세계는 이제 미국의 힘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선제공격안은 상대국가들로 하여금 불안을 주는 동시에

---

101 부시 대통령은 2003년 연두교서 연설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는 헤게모니가 아니라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세계는 미국이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President Bush'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8, 2003.

다른 국가들의 선제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차원의 군비경쟁을 유발 할 수 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지역의 국가들은 상대국의 위협에 대비해 그리고 러시아는 체첸반군, 중국은 신장 지구 위그르 족의 테러위협에 대비해 선제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선제공격 준비를 위해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려 할 것이다. 한편 일부 불량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비, 핵·미사일·생화학무기 개발·확산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선제공격 전략은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상대국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러시아는 체첸반군으로부터 테러공격을 받아 곧 바로 체첸반군을 공격하였다. 또한 이러한 선제공격 전략은 테러국가로 규정된 나라들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억제 무기를 개발하도록 만들게 할 수 있다.

선제공격안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은 동북아시아의 전략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제력에 비례한 군사력을 배양하려 할 것이다. 이에 맞서 일본의 군사력도 강화될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범세계적 차원의 군비감축을 이끌고 있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안보환경은 결국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한간에 군비감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끌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결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범세계적 차원에서 9·11 테러사건이후 조성되고 있는 국제안보환경은 미·중·러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가 테러위협 및 비대칭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공동의 이익과 필요성에 의해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테러행위를 새로운 국가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선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테러전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이끌어 나가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가인 유럽국가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반테러를 앞세워 미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관련국가들의 입장을 무시·외면해 나갈 때 그들로부터 반발기류가 뿜어 나올 수 있으며 이 때 국제안보환경은 안정 대신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게다가 비대칭 위협은 군사적 수단만으로 방어할 수 있는 위협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안보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또한 한 국가의 안보대응 능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제적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보다는 국제연대 안보의 중요성이 제고되게 된다.<sup>102</sup> 따라서 향후 국제질서는 반테러와 대테러 그리고 비대칭위협에 대처한 국가간 협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미국의 일방주의와 독불장군식 주도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각 국가간 처해 있는 사정을 고려하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추진될 것이며 때때로 미국에 협력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현상을 야기시키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21세기 미국의 안보전략은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면서 대립구도를 형성하기보다는 마·중이 경제적 이익을 같이 추구하면서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게끔 하는 게 지역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중 포위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

---

102 최종철, “미국의 9·11 테러와의 전쟁과 한반도: 의미와 영향,” 『정세와 정책』, 제63호 (2001), p. 16.

로 이것이 힘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일본, 한국 등 전통 우방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인도에 대해서도 무역, 투자,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끔 하고자 한다.

보다 효과적인 대중 견제를 위해 미국은 일본을 끌어안으려 한다. 미국은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방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비전을 높이기 위해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미·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어하며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sup>103</sup> 한마디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에 중추적 역할을 맡기려 하며, 유사시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방어의 방과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군사적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냉전기 대결적 자세를 버리고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한편, 러시아의 국내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후원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상호간 안보위협이 줄어 든 상태에서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비감축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에 공동의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반미 연합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들은 미국의 힘과 부를 질시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기를 원한다. 미국은 자국의 지도력에 순응하는 국가들에 대

103 Remarks by Richard Armitage, quoted in *Munhwa Ilbo*, May 10, 2001.

해 미국시장의 진출 허용, 원조, 각종 제재 제외, 미국의 기준으로부터 면세 허용, 각종 국제기구의 가입 지원 등으로 보상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여러 차원의 보상을 분배할 수 있는 한 그들이 반미 연합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미국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한다. 바로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시장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경제지원과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동맹을 체결한다고 할 때 누가 동맹을 주도할 것인가도 문제다. 과거 스탈린-모택동 시대에도 주도권 문제 때문에 반미동맹이 깨지고 말았다. 중국은 러시아의 혼란 때문에 자신이 으레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중국을 신뢰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러시아는 중국의 영향권 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유럽에 속하기를 더 바란다. 실제로 러시아는 자국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역동적인 중국에 굶히고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MD 체제 구상에 대해서 영국, 인도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질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해로부터 비롯된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로조차 MD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핵우위를 위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MD로 인한 외교적 갈등은 위험성이 큰 치킨게임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내에서조차 MD 계획을 반대하는 그룹이 있다. 그들은 실질적 위협이 상대의 핵미사일 공격보다는 미 항공나 국경을 통해 비밀리에 밀반입되는 소형 핵이나 생화학무기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 성숙도, 운용상에 있어서의 효과나 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완성도는 여러 면에서 불확실하다. 군사적 측면에서 MD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력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촉발시킬 것이고 이는 연쇄적으로 인도, 파키스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MD 체제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구축한다면 MD의 효과는 상실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부시 행정부는 MD 체제가 새로운 핵시대에 있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내세우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미국이 러시아와 핵탄두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두 나라는 핵우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막을 구축한다면 핵균형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은 절대적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 MD를 통해 미국은 상대의 선제공격을 방어하면서 2차 공격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우주방위계획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MD의 기술력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이 계획은 상대국에게 우주에서의 접근을 좌절시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주를 군사화·무기화시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추진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불가피하게 ‘공격용 위성무기’ 군비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로 인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이 위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지구촌 시대에 미국 등 몇몇 나라가 빈발하는 초국가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으며, 다자간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테러 및 비대칭위협, 대량살상무기 문제들을 미국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없다. 국제적 공조와 협

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 및 이란의 핵문제 해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그리고 대·반테러를 위해서라도 중국, 러시아, 미국의 동맹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미국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무법체제들에 의해 진행되는 무기·기술의 확산을 막고 반테러를 위해 원활한 국제연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 일환에서 미국은 동맹과 우방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특히 대테러전에 있어 국제사회의 협력은 요원하다. 테러와 같은 새로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의 협조와 정보력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미국의 독자적 힘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중국, 러시아, 중동지역의 국가들을 비롯, 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은 국제테러조직을 척결하는 데 있어 중국, 러시아가 협력한다면 중국의 위그르족 문제와 러시아의 체첸 문제에 대해 문제시 삼지 않으려 할 것이다.

테러리즘과 국가간 갈등으로 촉발될 수 있는 문명의 충돌을 어떻게 피하느냐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국제사회의 임무이다. 이슬람권에는 반미 국가가 있는가 하면 친미 국가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 반이스라엘 국가임에는 분명하다. 만약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국가들 간 군사적 충돌이 표면화될 때, 문명의 충돌로 치솟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인류는 문명의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국가간 갈등해결에 군사적 방법이 아닌 유연하고 다양한 접근과 국제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화된 안보 관리’(coordinated security management)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선 동의된 이해의 결합, 정보 교환, 신뢰구축과 다른 연계 협력과 보완 조치, 공동 군사방어계획 및 고위급회담 등이 필요시 된다.<sup>104</sup> 또한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분과 함께 미국이 일방주의적 독선주의로 나아기려 할 때 세계는 이를 견제해야 한다. 미국인 역시 견제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독단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견제목소리는 국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해 경찰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때, 미 국민과 국제사회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협력해야 할 것이다. 반면 미국이 다른 나라의 견해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의 안보전략을 추진해 나갈 때 국제사회는 재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국제안보환경을 이끄는 것이며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것이다.

---

104 Lewis A. Dunn, "Coordinated Security Management - Towards a 'New Framework,'" *Survival* 43, no. 3 (Autumn 2001), p. 86.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경순. 『NATO 동유럽 확대와 러시아의 대응』. 경기: 세종연구소, 1998.
- 김종완. 『냉전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2003-9. 경기: 세종연구소, 2003.
- 이헌경.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_\_\_\_\_.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와 미국의 대응: 전략과 시뮬레이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이헌경 외.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정항석. 『미국패권의 이해』. 서울: 평민사, 2001.
- Creveld, Martin L. Van, Martin L. van Creveld, and Martin Van Creveld. *The Transformation of War*. Free Press, 1990.

### 2. 논문

- 박채복. “북-EU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유럽연합의 역할.” 『북한-유럽연합 관계와 전망』 (한국세계지역학회·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2002.4.3).
- 이상우.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 오기평 편. 『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 서울: 오름, 2000.
- 이상현. “MD와 자살 테러: 비대칭 전쟁과 21세기 안보환경.” 『정세와 정책

- ], 제63호 (2001).
- 이수형. “제4세대 전쟁의 등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비대칭 위협을 중심으로” 『9·11 테러 이후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제48차 학술회의 2001.11.22).
- \_\_\_\_\_. “21세기 국제분쟁의 변화경향에 관한 이론적 분석: 제4세대전쟁, 네트워크, 비대칭위협을 중심으로” 『21세기의 신 국제질서와 신 안보개념』 (21세기 정치학회 2002 추계학술회의, 2002.9.6).
- 정우영. “화학 및 생물무기 테러 대응정책.” 『화생무기의 국제적 위협실태 및 대처방안』 (제11회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 2001.10.12).
- 최종철. “미국의 9·11 테러와의 전쟁과 한반도: 의미와 영향.” 『정세와 정책』, 제63호 (2001).
- Fisher, Richard D., Jr. "Time to Stop North Korea's Missile Blackmail." *The Heritage Foundation Executive Memorandum*, no. 550 (September 1998).
- Kim, Kyoung-Soo. "North Korea's CB Weapons: Threat and Cap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4, no. 1 (Spring 2002).
- Lee, Hun Kyung.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and US Non-proliferation Strategy."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4, no. 2 (Fall 2002).
- Lind, William S. et al. "The Changing Face of War: Into the Fourth Generation." *Marine Corps Gazette* (October 1989).
- Metz, Steven. "Strategic Asymmetry."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01).
- Moss, Kenneth B. "Reasserting American Exceptionalism - Confronting

the Worl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Bush Administration." In Feiedrich-Ebert-Stiftung, ed., *Internationale Politik und Gesellschaft*. Bonn: Verlag J.H.W. Dietz Nachfolger GmbH, 2003.

Yuan, Jing-Dong. "Studying Chinese Security Policy: Toward an Analytical Framework."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8, no. 1 (Spring/Summer, 1999).

### 3. 발언, 연설, 증언, 보고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and the American People, September 20, 2002.

"Bush Administration Releases New WMD Strategic Plan," December 11, 2002.

Bush, George W.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cember 11, 2002.

Department of Defense. "Special Briefing on the Nuclear Posture Review," January 9, 2002.

Gershwin, Lanrence K. "Cyber Threat Trends and US Network Security." Statement for the Record for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June 21, 2001.

Joint Chiefs of Staff. *Joint Strategic Review*.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1999.

Joint Declaration on New U.S.-Russia Relationship. *Washington File*,

May 24, 2002.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Foreign Missile Developments and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2015," December 2001/September 1999.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Submitted to Congress on December 31, 2001.

"The National Strategy to Security Cyberspace." February 2003.

Powell, Colin L. Confirmation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enate, January 17, 2001.

President Bush'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8, 2003.

President George W. Bush's Inaugural Address, January 20, 2001.

"President Outlines War Effort."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George C. Marshall ROTC Award Seminar on National Security, April 17, 2002.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NSC-1. "U.S. Policy on Ballistic Missile Defence and Related Arms Control Issues," February 1, 2001.

President's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and the American People, September 20, 2001.

Remarks by Donald H. Rumsfeld on Secretary Rumsfeld Outlines Space Initiatives, May 8, 2001.

Remarks by President Bush on U.S. Will Meet WMD Threat with 'Confidence, Determination,' December 11, 2002.

Remarks by the President to Students and Faculty a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May 1, 2001.

Secretary-General of the OIC. Abdelouahed Belkeziz's Remarks on September 12, 2001.

Transcript: Bush Announces Start of a "War on Terror." *Washington File*, September 20, 2001.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New Strategic Framework." Remarks by the President at 2002 Graduation Exercise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West Point, New York, June 1, 2002.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17, 2002.

Wilson, Tom. "Threats to United States Space Capabilities." Prepared for the Commission to Assess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Spa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Department of Defense Studies, 2000.

#### 4. 신문, 방송, 웹사이트

Fournier, Ron. "Bush Warns Iraq, N.Korea on Weapons." *AP*, November 27, 2001.

George W. Bush's Remarks. Cited on Bob Woodward. "A Course of 'Confident Action'." *Washington Post*, November 19, 2002.

Inderfurth, Karl F. "Leftovers From an Old War." *New York Times*, November 7, 2001.

Loeb, Vernon. "New Bases Reflect Shift in Military." *Washington Post*,

June 9, 2003.

Pan, Philip P. "China's Improving Image Challenges U.S. in Asia." *Washington Post*, November 15, 2003.

Perry, William and John M. Shalikashvili. "The US Military: Still the Best by Far." *Washington Post*, August 10, 2000.

Pfaff, William. "Empire isn't the American Wa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9, 2002.

Ricks, Thomas E. "Bull's Eye: Pinpoint Bombing Shifts Role of GI Joe." *Washington Post*, December 2, 2001.

"2005 Missile Defense Inception Is at Risk." *Washington Times*, August 9, 2000.

「로동신문」.

「문화일보」.

「민주조선」.

「연합뉴스」.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讀賣新聞」.

*Defense News*.

*Los Angeles Times*.

*New York Times*.

*Washington Times*.

[home.earthlink.net/~platter/neo-conservatism](http://home.earthlink.net/~platter/neo-conservatism)

[www.clw.org/clw/transition2000/rumsfeldhearing.html](http://www.clw.org/clw/transition2000/rumsfeldhearing.html).

[www.fas.org/nuke/guide/dprk/bw/index.html](http://www.fas.org/nuke/guide/dprk/bw/index.html).

[www.fas.org/nuke/guide/dprk/facility/cw.htm](http://www.fas.org/nuke/guide/dprk/facility/cw.htm).

[www.newamericancentury.org/statementofprinciples.htm](http://www.newamericancentury.org/statementofprinciples.htm).

[www.whitehouse.gov](http://www.whitehouse.gov).

[www.worldtribune.com/worldtribune/Archive-.../ss-terror-05-17.htm](http://www.worldtribune.com/worldtribune/Archive-.../ss-terror-05-17.htm).